

1950년대 북한의 정치와 권력 : 인전대적 동원 체제 형성 과 3중의 권력 투쟁

박형중(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정치학)

I. 머리말 : 인전대적 동원 체제 형성과 3중의 권력 투쟁

1940~1950년대 북한 정치 과정의 결과는 조선로동당과 그것을 핵으로 하는 북한 사회 전체를 그 내부가 위계적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위로부터 아래로의 명령 전달과 접수 및 집행이라고 하는 철두철미한 인전대적 동원 장치로의 재편이었다. 이러한 인전대적 동원 체계의 특징은 중앙 권력의 단일한 의지에 의해서 장악되는 ‘사상, 의지, 행동의 통일체’라는 것이며, 권력 안정과 생산 증대라는 두 가지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엄청난 동원을 실현해 낸다는 것이다. 이러한 체계는 중앙 권력이 영토 내의 모든 개인과 단체의 자율성을 포기시키고, 이들을 중앙의 단일 의사에 의해서 지배되는 위계적이고 통일적인 조직 구조로 재편시켰을 때에만 성립할 수 있다. 이러한 재편의 과정과 결과로서 권력 중앙은 권력 중하층 요원과 모든

개인을 중앙이 요구하는 무한한 목표의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무한정 동원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여기서 질문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인전대적 동원 체제가 과연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성립할 수 있었는가이다. 이러한 인전대적 동원 체제는 북한 사회 내의 총체적 권력 투쟁의 결과로서만 탄생할 수 있었다. 이는 비교적 상호 독립적인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첫째는 상이한 파벌간에 생존을 유지하고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투쟁, 즉 조선로동당 상층부의 권력 투쟁이다. 다시 말해, 권력 엘리트 간의 상호 통제와 견제 및 균형을 파괴하고 당내 혜계모니를 독점하기 위한 권력 투쟁, 또는 이러한 상황의 도래를 방해하고 자기 지분을 보존하기 위한 권력 투쟁이다. 둘째는 권력 상층부의 권력 중하층 집행 요원에 대한 권력 투쟁이다. 권력 상층은 중하층 집행 요원들이 완전히 상층의 이익과 요구의 한계 내에서만 기능하도록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진다. 즉 상층은 중하층 요원들을 무조건 항복시킨 완전한 통제 상태를 지향한다. 상층의 이러한 시도는 자신이 처분하는 권리와 자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중하층 집행 요원의 개별 및 집단 이익 그리고 생존 번영 관심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중하층은 상층의 요구에 저항하거나 또는 형식적인 복종만을 보여주고자 시도한다. 셋째는 상층과 중하층을 포함한 권력 전체, 즉 조선로동당 대 사회 간의 투쟁이다. 여기서 ‘사회’의 범주에는 개인, 노동자, 농민 등 권리의 통치 대상이 되는 모든 요소들이 포함된다. 권력은 사회의 모든 자율적 행위 능력과 집단적 이익 표출 능력을 박탈하고 자신의 권력 통제하에 두고자 한다. 이는 자신이 장악할 수 있는 처분 자원과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회의 이익과 일치하지 않는다. 사회는 권리의 요구에 저항하거나 또는 표면상의 형식적 복종만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러한 권리 투쟁에는 일정한 특징이 있다. 사회주의 정치 이론은 권리의 확대와 침투에 관한 이론으로서, 자유민주주의와는 달리 권리의 획득과

행사에 대한 규칙 그리고 권력에 대한 방어와 권리의 순차에 대한 규범이 매우 취약하게 발전되어 있다.¹⁾ 따라서 사회주의적 권력관에 기초하는 체제에서는 권리 엘리트, 권리 상층과 권리 기층, 당과 사회 간의 권리 투쟁에서 정해진 규칙과 범할 수 없는 한계 등이 결정되어 있지 않다.²⁾ 결국 권리 획득과 행사에서의 한계 및 예측 가능성은 소멸하고 상대의 의도와 능력에 대한 만성적 의심의 상황을 초래시킨다. 불안과 의심의 상태에서 개별 당사자는 자신의 안전을 가장 확고히 보장하는 방편으로 끊임없이 자신의 권력을 확장하고자 한다. 즉, 정치제도 자체가 개별 권리자 간의 권리 갈등이 ‘관습화된 방도’에 의해서 처리될 수 없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만약 갈등 상황이 발생하면 다른 상황이 일정할 때 강제 수단과 강요 요원의 양을 적게 가진 쪽이 ‘굴복’해야 한다. 권리 당사자들은 이러한 갈등 상황을 예견하면서 ‘자신의’ 강제 자원의 양이 다른 권리자에 뒤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그런데 다른 권리자들도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권리자 개인들은 자신의 권리 수단과 권리 요원을 최대한 확대해야만 안심할 수 있다. 개인들은 이렇게 할 때만 갈등 상황이 일어날 경우 ‘굴복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을 확신할 수 있다.³⁾ 사회주의 정치 체제

-
- 1) 박형중, “북한에서의 정치의 개념과 기원”, 한국정치학회 춠계 발표회 자료집(1998. 4. 25.), 25~27쪽.
 - 2) 일반적으로 “탈스탈린화”는 사회주의 권력 체계에서도 취약하지만 일정한 규범과 규칙을 정착시켰다. 이에 대하여 Graeme Gill, “Institutionalism and Revolution : Rules and the Soviet Political System”, *Soviet Studies*, vol. XXXVII, no. 2(April 1985), pp. 213~215 ; Graeme Gill and Roderic Pitty, *Power in the Party : The Organization of Power and Central-Republican Relations in the CPSU*(New York : St. Martin's Press, Inc., 1997), pp. 1~22 ; 이 견해는 박형중, “북한에서의 정치의 개념과 기원”에도 소개되어 있다.
 - 3) Achim Siegel, *Die Dynamik des Terrois im Stalinismus : Ein strukturtheoretischer Erklärungsversuch*(Pfaffenweiler : Centaurus-Verlagsgesellschaft, 1992), p. 109. 사회주의 사회를 기본적으로 권리 체계로 보면, 그 권리 과정의 자체 동태성에 관한 분석으로서 이서술과 함께 Leszek Nowak, *Power and Civil Society : Toward a Dynamic Theory of Real Socialism*(New York : Greenwood Press, 1991) 참조. Nowak은 폴란드의 철학자로서 마르크스의 (경제결정론적) 유물론적 사회 이론을 지양하여, 유물론적 (구조주의적) 이론들을

에서 모든 당사자는 권력 과정상에서의 이러한 만성적 불안과 의심의 상태에 자신을 적용시키며 살아 남기에 적절한 (정치) 행태를 보여준다.⁴⁾

이러한 관계는 조선로동당 내의 개별 파벌 지도자 간의 혜계모니를 둘러싼 투쟁, 당 상층과 당 하층 간의 투쟁, 당과 외부 사회와의 투쟁 과정에도 적용된다. 이하에서 이러한 투쟁의 과정이 북한의 구체적 역사 전개 속에서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분석 서술한다.

II. 상층 파벌 투쟁

1945년 일본의 항복은 한반도에 권력의 공백 상태를 초래했다. 일본을 대신하여 북한 지역을 점령한 소련은 한국 반도가 소련을 공격하기 위한 기지로 되지 않게 하고 한반도 소련의 정치경제적 이익을 보장해 줄 좌익 정부를 수립한다는 정치적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⁵⁾ 이러한 소련의 관심은 북한에 공산당이 주도하는 독자적 정부를 수립할 때 가장 잘 보장될 수 있었다. 소련의 이러한 정책은 북한 지역에서 공산주의 세력을 적극적으로

보존하지만 경제결정론을 포기하는 사회주의 권력 이론을 발전시키고 있다. Siegel은 Nowak의 이론을 소련의 스탈린주의 분석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이고 있다.

- 4) 이러한 정치 제도의 특성 때문에 그 정치 제도에 참여하거나 살아 남는 인간은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특별한 정치 행태와 '심리적 특성'을 발전시키게 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스탈린과 김일성의 끊임없는 권력 확대와 '권력욕' 등을 설명하는 대서 최우선적인 것은 사회주의 권력의 제도적 특성이어야 한다. 개별 권력자의 '심리적 특성'은 부차적 설명 요인일 뿐이다.
- 5) 전현수, "소련군의 북한진주와 대북한 정책", 『한국독립운동사 연구』, 제9집(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 연구소, 1995), 34~35쪽; 전현수, "쉬띄꼬프 일기"가 말하는 북한정권의 성립과정", 『역사비평』, 30호(1995년 가을), 162쪽.

강화시키는 한편, 남한과 분리된 독립적 공산당을 북한에 건설하여, 북한 독립 정권의 운영을 위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점령 후 소련이 북한에서 발견했던 것은 상호 분열되어 경쟁하고 있는 취약한 공산주의 세력이었다. 이러한 분열상과 상호 경쟁은 파벌 상호간의 적대감을 강화시키고 끊임없는 투쟁의 상태로 번지며, 결국 소련의 국가 이익 관찰을 파탄시킬 위험을 함축하고 있었다. 소련 점령군은 자국의 이익에 맞추어 한국 공산주의 운동을 재편하고 확대시키는 작업을 수행했다. 가장 우선적인 작업은 소련 점령군의 권위와 개입을 토대로 비공산계 세력을 위축시키면서 특히 친소계 세력 확장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었다. 이와 함께 소련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한국 공산주의 운동의 강령과 조직 방침을 결정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이었다. 그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 김일성이었다.

김일성은 소련의 대 한반도 국가 이익을 가장 충실히 대변할 수 있는 인물로서 소련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⁶⁾ 소련은 소련 정책의 큰 태두리 안에서 진행되는 모든 구체적 작업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김일성에게 위임하는 외양을 갖추면서 이를 배후에서 적극 후견함으로써 다른 파벌에 의해 전혀 수정되거나 거부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소련이 김일성에게 바랐던 것은 그가 한국 공산주의 운동 내 각 파벌의 분열적 대립과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하여, 전체로서의 한국 공산주의 운동이 소련의 북한 또는 한반도에 대한 정책 이익에 종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소련의 지지는 김일성계가 다른 파벌과의 권력 경쟁에서 구조적 우세를 차지할 수 있게 해주었다.

국내계와 옌안계 등 다른 권력 파벌은 김일성 파벌의 하위 연합 세력으

6) 스칼라피노·이정식 공저, 『한국공산주의운동사 2 : 해방 후편(1945~1953)』(서울 : 돌베개, 1986), 414, 419쪽 ; 안드레이 란코프, 김광린 역, 『소련의 자료로 본 북한 현대 정치사』(서울 : 도서출판 오름, 1995), 76, 79쪽.

로서만 등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두 파벌은 소련의 개입이 없을 경우 김일성계를 굴복시켰을지도 모르는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김일성이 최고 지도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만 했다.⁷⁾ 첫째, 파벌간의 갈등 상황에서 다른 파벌에 패배하지 않고, ‘공갈에 굴복’하거나 종속되지 않기 위해서는 김일성 파벌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과 강제 수단을 끊임없이 확장해야 하는 것이다. 김일성 파벌이 다른 파벌을 능가하는 강제 수단과 자원을 자신의 권역 안에 확보할 때에만 갈등 상황의 경우 자신의 지위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둘째, 김일성은 경쟁하는 파벌 또는 연합중인 어느 한 세력이 지나치게 강해지지 않도록 각 파벌간의 개략적인 세력 균형에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 한 방법은 자신의 권력 지위를 잠재적으로 위협할 만한 세력이나 해체모니적 지위에 도달할 것 같은 세력을 숙청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김일성에 의한 숙청은 이 같은 철저한 이성적 판단에 따랐다.

김일성 파벌이 활용할 수 있는 강제 수단과 자원의 증대, 잠재적 경쟁자에 대한 숙청 작업은 실제로 밀접하게 연계되어 진행되었다. 비록 김일성이 최고위 중재자로 기능하지만, 파벌 연합 상태중에서도 각 파벌은 자신의 이익과 강령을 관철시키고자 노력하며, 자신의 파벌에 소속된 요원에게 직책과 자원이 더 많이 배정되도록 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했다. 직책과 자원의 총량이 일정한 상태에서 이러한 정치적 경쟁은 제로섬 게임이 될 수밖에 없으며, 한 파벌(연합)이 진출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다른 파벌(연합)을 밀어내야만, 즉 숙청해야만 했다. 한 파벌에 대한 숙청은 파벌 지도자로부터 시작하여 그와 직간접으로 연루된 하위직에 이르기까지 광범하게 진행되었다. 이러한 광범한 숙청은 승리하는 파벌(연합)측 요원들에

7) 여기에 등장하는 공산당 상층부에서의 권력 투쟁의 특성에 관한 것은 Siegel이 스탈린 시대의 상층 권력 투쟁과 숙청을 설명하기 위해 전개하고 있는 이론적 문제들을 참조한 것이다. Siegel, *Die Dynamik des Terros im Stalinismus : Ein strukturtheoretischer Erklärungsversuch*, pp. 119~125.

게 광범한 정치적 상승의 공간을 열어놓았다. 김일성은 적대 파벌을 제압함으로써 지도 엘리트 내부에서 잠재적 경쟁자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파벌(연합) 소속의 엘리트와 하급 요원에게 당분간 대량적이며 급속한 정치적 상승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다. 상당한 강제 지원을 확보하고 있는 권력 기구의 일부를 밀어내는 숙청의 과정은 공개적이고 폭력적인 저항을 유발시킬 위협을 함축하고 있었다. 이를 분쇄하기 위하여 바로 이 숙청을 통해 대량 급속 상승하게 될 엘리트와 하급 요원들이 동원되었다.

파벌 투쟁의 최초의 희생자는 북한 지역의 국내계였다. 이들은 한국 공산주의 운동을 소련의 정책 이익에 종사하도록 조정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 국내계는 서울의 박현영과 연계를 가지면서 북한에 독자적 공산당이 건설되는 것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국내계는 도당 수준의 독자적 세력 기반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소련이 후원하는 김일성 중심의 세력이 북한 지역에 뿌리내리기 어렵게 만들었다. 소련의 지지하에 김일성은 만주계, 소련계, 온안계의 연합을 구성, 북한 지역에 도당 수준의 강고한 기반을 가지고 있던 국내계를 제압해 나갔다.⁸⁾ 이러한 과정에서 김일성에 대한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일 수도 있었던 평양의 현준혁이 일찍이 암살당하였고, 그 다음으로 오기섭 등 함경남도의 공산주의자들이 무력화되었다.⁹⁾ 1948년 제2차 당 대회는 국내계에 대한 본격적 공격을 가했다. 이 공격의 목적은 조만간 예견되었던 남한 출신 공산주의자의 월북이 박현영계 국내계의 세력을 확대시키는 것을 방지하고,¹⁰⁾ 국내계가 장악하고 있던 직책을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소련계와 온안계로 넘기는

8) 徐東晚, “北朝鮮における社會主義體制の成立 1945～1961”(東京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95), 27～28쪽.

9) 시바다 미노루, 이원복 역, 『김일성의 야망, 숙청의 역사』(서울 : 겸지사, 1987), 73～75쪽.

10) 스칼라피노·이정식 공저, 『한국공산주의운동사 2』, 482쪽 ; 徐東晚, “北朝鮮における社會主義體制の成立 1945～1961”, 111쪽 ; 백학순, “북한에서의 ‘단일지도력’의 확립과 당·국가 건설”, 『현대북한연구』, 2권 1호(1999), 37쪽.

것이 목적이었다. 국내계에 대한 공격은 명분상으로 당내의 ‘종파’ 제거와 상부의 결정에 대한 하부의 절대적 복종 의무를 내걸고 진행되었다.

김일성 중심의 파벌 연합은 상층 직책에서 국내계와 그 지지자들을 제거함으로써 자파 소속 엘리트와 중급 요원에게 광범한 상승 기회를 열어주는 한편, 당원 확장 정책을 통해서 세력 기반 확장을 꾀했다. 김일성 파벌은 김일성이 당의 최고 지도자라는 구조적 이점을 활용하여 특히 당원 확장 정책을 자파 세력 확장의 디딤돌로 삼았다. 김일성계는 당원 확장과 새로운 당 간부 육성에서 주도권을 확보함으로써 북로당 내에 김일성과 하급 간부, 당원 간의 연계를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김일성은 1948년 제2차 당 대회 이후 당의 중하층에 대한 배타적 장악과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¹¹⁾

한국전쟁과 그 이후에도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었다. 한국전쟁에 중공군이 개입하여 중국의 영향력이 강화된 가운데 중국의 후원으로 김일성의 잠재적 경쟁자가 될 수도 있었을 무정이 1950년 12월 당 중앙위 제3차 전원 회의에서 숙청당하였다.¹²⁾ 이어서 소련의 북한 정치에 대한 영향력을 상징하며, 소련의 지지를 바탕으로 김일성의 권위에 도전할 수도 있었을 허가이가 1951년 제4차 전원회의에서 숙청되었고 소련계 도당위원장들이 비판 받았다.¹³⁾ 허가이의 숙청은 두 가지 의미를 가졌다. 첫째, 박현영의 국내계에 대하여 관용을 보이던 허가이를 제거함으로써 소련계와 국내계의 연합 가능성을 예방적으로 제거하는 것이었다.¹⁴⁾ 둘째, 허가이의 숙청은 당 사

11) 이주칠, “북조선로동당의 당원확장과 당의 변화”, 『현대북한연구』, 창간호(1998), 151 ~187쪽.

12) 스칼라피노·이정식 공저, 『한국공산주의운동사 2』, 512쪽.

13) 徐東晚, “北朝鮮における社會主義體制の成立 1945~1961”, 226쪽; 안드레이 란코프, 『소련의 자료로 본 북한 현대 정치사』, 112쪽.

14) 김창순, 『북한 15년사』(서울: 지문각, 1961), 133쪽; 시바다 미노루, 『김일성의 야망, 숙청의 역사』, 95쪽; 스칼라피노·이정식 공저, 『한국공산주의운동사 2』, 133쪽.

업에서의 주도권을 김일성계가 장악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김일성은 허가이의 ‘체벌주의’와 ‘관문주의’적 당원 모집 정책을 비판함으로써 한국전쟁 시기의 숙당 작업 과정에서 위협받던 김일성계 당내 세력을 보존하고자 했다.¹⁵⁾ 또한 농민층에게 대대적으로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당내의 남로당계 중견 간부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새로운 권력 기반을 구축하고자 했다.¹⁶⁾

남로당계에 대한 숙청은 1952년 12월 15일 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 예고되고 시작되었다. 남로당계에 대한 숙청은 패전 책임의 전가를 통한 잠재적 경쟁자의 제거, 한국전쟁에서의 패배와 함께 남한 내의 빨치산 및 지하 조직에 대한 통제에서 남로당의 효용성 상실, 한국전쟁 중 남로당이 확보한 대남 군사 능력, 조선로동당 내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남로당계로 인한 파별간 경쟁 관계의 악화 가능성 등의 위험을 제거하는 기능을 했다.¹⁷⁾ 남로당과 북로당의 합당 당시 남로당은 명분상 간부직의 약 3분의 1을 배정받았다. 물론 북로당계가 주요 당직을 독점하였지만, 오랜 정치 투쟁 경력 속에서 노련하게 단련된 남로당계의 영향력은 산술적인 차원을 넘어섰다.¹⁸⁾ 남로당계에 대한 숙청 작업은 중앙 기관의 차원을 넘어서 하부 기관, 조직에까지 확대되었으며, 숙청의 범위도 박현영, 이승엽을 중심으로 한 상층 그룹뿐만 아니라 남로당 조직원과 그 관련자 전체로 확대되었다. 1953년 1월부터 ‘제5차 전원회의의 문헌 검토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6월부터는 ‘재검토’ 사업이 새로 시작되었으며, 이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6월 중순부터 당 중앙위원회로부터 지도 그룹이 하부 조직으로 파견되었고, 각 도·시·군·당 단체에서도 지도 그룹이 조직되어 초급당 단체로 파견되었다.¹⁹⁾ 이러한 숙청에 의해 북한의 당·정권 기관에서

15) 시바다 미노루, 『김일성의 야망, 숙청의 역사』, 94쪽.

16) 스칼라피노·이성식 공저, 『한국공산주의운동사 2』, 133쪽.

17) 김남식, 『남로당연구 1』(서울:돌베개, 1984), 477쪽.

18) 방우후, 『북한 「조선로동당」의 형성과 발전』(서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70), 160쪽; 고준석, 『북한 현대사 입문』(서울: 도서출판 합성, 1990), 121쪽.

남로당계 및 남한 출신들은 상당 부분 거세되었고, 김일성계에게 광범한 정치적 상승 공간이 마련되었다.²⁰⁾

파벌간의 세력 확장을 둘러싼 투쟁은 1955년 소련계에 대한 공격과 1956년 옌안계에 대한 숙청으로 재연되었다. 이 두 권력 투쟁은 정책 노선의 대립을 매개로 하여 진행되었다. 각 파벌은 자신의 권력 기반을 확장할 수 있는 내용의 정책 노선을 옹호하고 관철시키고자 노력했다. 자신의 노선을 관철시킨 파벌은 정책 노선의 관철과 정책 노선 위반에 대한 징계를 명분으로 다른 파벌이 이미 장악하고 있던 직위와 자원에 대해 간섭하고 '탈취'하여 자신이 관掌하는 직책과 자원을 확장할 수 있었다. 정책 노선 투쟁에서 패배한 측은 명분상으로도 밀려나는 한편, 직책과 자원을 탈취당한 상태에서 자신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되므로 업무상의 실패에 대한 징벌이라는 또 다른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 심각한 위협에 빠진 파벌은 자포자기의 방어 조치를 시도했다. 자신의 상황이 막다른 골목에 몰린 것을 깨달은 이 파벌은 파멸적 일반 노선을 변경시키기 위해서 반격을 시도했다.

각 파벌이 주장하는 정책 노선은 국가 전체의 일반 이익을 대표하는 외 견상의 논리를 전개하면서도 자파의 권력 기반 강화 및 상대 파벌의 약점에 대한 공격을 핵심 내용으로 했다. 1950년대 소련계의 권력 기반은 전후 복구를 위한 소련의 대대적인 원조와 그로부터 발생하는 소련의 정치

19) 방이후, 『북한「조선로동당」의 형성과 발전』, 161쪽 ; 徐東晚, “北朝鮮における社會主義體制の成立 1945～1961”, 259쪽.

20) 남로당계가 차지했던 당내 직위에로의 열성 분자 충원은 1953년 12월 당 중앙위 제7차 전원회의를 전후로 이루어졌다. 주로 갑산계가 등장하였으며, 일제 시대 적색 농조와 노동 운동에 참여했던 새로운 국내계가 도당위원장과 인민위원회장직에 대거 등용되었다. 徐東晚, “北朝鮮における社會主義體制の成立 1945～1961”, 291～294쪽 ; 강상호는 2,000명이 문헌 재토의 사업의 대상이 되었다고 한다. 강상호, “내가 경험한 북한의 숙청”, 제25회, 『중앙일보』, 1993년 6월 28일 ; 徐東晚, “北朝鮮における社會主義體制の成立 1945～1961” 새인용.

에 대한 간섭권과 연계되어 있었다. 또한 중국인민해방군의 북한 장기 주둔은 옌안계가 세력을 유지할 수 있는 권력 기반이었다. 김일성은 최고 지도자로서의 기득권을 수단으로 급속히 당원을 확장하고, 아울러 중상층부에 새로운 자파 국내계를 진출시켜 세력을 확장했다. 이는 소련계와 옌안계의 세력 확대 이익과 충돌했다.

김일성계에 대하여 소련계와 옌안계는 대체적으로 공동 전선을 취했다. 스탈린 사후 이들은 두 가지 권력 자원을 활용했다. 첫째, 개인 숭배 비판, 둘째, 경공업 및 인민 생활 중시 노선이다. 개인 숭배 비판은 김일성과 김일성계가 이미 도달해 있는 우세한 세력 확장을 직접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명분이었다.²¹⁾ 경공업 및 인민 생활 중시 노선은 김일성계가 자신의 세력 기반을 지속해서 확장하는 수단이었던 중공업 우선 노선과 농업 집단화 노선을 저지시킬 수 있는 명분적 권력 자원이었다. 김일성계가 주도한 중공업 우선 노선과 가속 성장에 대한 소련계와 옌안계의 반대는 소련의 지지를 기대할 수 있었다. 나아가 경공업 및 인민 생활 중시 노선은 휴전 후 1950년대 중반 북한 경제의 폐폐상, 중공업 우선주의 및 가속성장 정책, 그리고 농업 협동화의 급격한 추진에 따른 일부 간부층과 일반 주민의 불만과 저항을 동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었다.²²⁾ 특히 김일성계의 주도하에 1954년 11월부터 급속히 추진된 농업 협동화, 1954~1955년 말의 무리한 양곡물 수매 사업은 일반 주민의 광범한 저항과 현장 간부의 실패 현상을 보여주고 있었다.

김일성계가 직면한 것은 외세의 개입 및 내부 반란 가능성이라는 이중의 위협이었다. 김일성계는 자신이 키워내고 급속한 출세(약속)를 보장해 왔던 종속적인 당의 중하층을 기반으로 이 두 가지 위협을 극복하는 데 성

21) 안드레이 란코프, 『소련의 자료로 본 북한 현대 정치사』, 189쪽.

22) 속청당한 옌안계의 한 인물이 본 당시 상황은 려정, 『붉게 물든 대동강, 전 인민군 사당 정치위원의 수기』(서울 : 동아일보사, 1991), 57~79쪽.

공했지만, 많은 대가를 치러야 했다. 과별간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1954~1956년의 3개년 계획과 1차 5개년 계획은 김일성계의 주도하에 결국 중공업 우선주의와 가속 성장 노선으로 귀결되었으며, 농업 협동화도 관철되었다. 경공업 중시 노선보다는 중공업 우선 노선은 북한의 대소 의존을 완화해 갈 수 있는 정책 노선이었으며, 주로 김일성계의 새로운 기술 간부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었다.²³⁾ 나아가 농업 협동화는 남로당계 숙청 이후 새로이 충원된 국내계를 주축으로 농촌 지역에 김일성계의 세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정책 노선이었다.²⁴⁾ 김일성계는 1954~1955년 박창옥에 대한 비판과 ‘사상 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 비판’을 통해 소련계의 세를 꺾는 데 성공하면서도 일부 타협 정책을 취했지만, 1956년 8월 전원회의에서 옌안계가 공개적으로 도전하자 반격에 나섰다. 이러한 반격은 1956년 9월 소련과 중국의 개입에 의해 일시 좌절되었지만, 그 후 공세적으로 추진되었다. 공세적 반격은 옌안계 엘리트와 과별 요원에 대한 광범한 숙청을 넘어서서 김일성계가 추진하던 중공업 우선주의에 입각한 가속 성장과 급속한 농업 협동화 정책과 그 결과에 대한 잠재적 현시적 불만을 제압하는 방향에서 추진되었다. 이러한 광범한 숙청은 그에 비례하는 격렬한 투쟁과 김일성계 엘리트 및 과별 요원의 광범한 상승 이동을 생산해냈다.

23) 구체적 역사 과정은 徐東晚, “北朝鮮における社會主義體制の成立 1945~1961”, 359~368쪽.

24) 구체적 역사 과정은 위의 글, 291~294쪽.

III. 권력 상층과 중하부 권력 요원 간의 갈등과 투쟁

1. 당-당 단체-사회의 인전대적 조직 동원 관계

조선로동당은 그 내부가 상급 기관은 명령을 내리고 하급 기관은 그것을 엄격히 집행하는 위계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다. 즉 조선로동당에서 “당의 혁명성과 지혜와 경험이 집중”된 “김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 중앙위원회”는 “당의 심장이며 뇌수이며 투쟁의 참모부”이고, “전체 당 단체는 당 중앙위원회에 엄격히 절대 복종하며, 당 하급 기관은 당 상급 기관의 결정을 의무적으로 집행”한다는 것이었다. 위계적 각급 단위간의 비동일성은 당원의 “당에 무한히 충실향할 의무”에 기초한 당의 “사상적 및 조직적 통일”에 의하여 극복되어야 했다. 이러한 원칙들에 의해 “당의 사상 및 행동의 통일을 보장하고, 전 당의 활동을 유일한 목적에 복종시키며, 결정적 사업 부문에 자기의 력량을 집중시킬 수” 있고, “당 정책의 성과와 실행을 위한 투쟁으로 당 단체들과 당원들을 옳게 조직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²⁵⁾

이러한 위계적 구조는 조선로동당과 외부 사회와의 관계에서도 재생산되고 있었다. 즉 조선로동당은 우선 내부의 엄격한 통일 단결과 위계적 의사 전달 체계 및 집행 의무를 확립한 다음에 그것을 모범으로 그러한 통일한 내부 관계를 조선로동당과 외부 사회와의 관계에서 재생산하고자 했다. 즉 “불패의 학설”인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의하여 지도되는 조선로동당은 “우리나라 로동 계급과 전체 근로 대중의 선봉적·조직적 부대”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명제는 당의 의사를 외부 사회의 영향과 통제로부터 해방시

25) 박정애, “조선로동당 규약 개정에 대한 보고”, 국토통일원, 『조선로동당 대회자료집 제1집』(서울 : 국토통일원, 1988), 508, 510, 518쪽.

키며, 당을 외부 사회에 대한 명령자로서 간주하고 있었다. 이러한 당과 외부 사회 간의 비동질성은 “당과 대중 간의 혈연적 련계”에 의해서 극복되어야 했다. 즉, 당은 비당원과 사회 전반에 대해서 “당의 정책을 일상적으로 해설함으로써 정치적으로 지도하고 당의 영향을 주며” 그 실행을 위한 투쟁에 군중을 조직 동원한다는 것이었다. 당과 외부 사회와의 관계에서 핵심적 연결 역할을 하는 것은 조선로동당 내부에서 가장 하급 단위인 ‘초급 당 단체’였다. 이 단체는 “공장, 기업소, 운수 직장, 건설 직장, 임경소, 농목장, 협동 조합, 국가 기관과 교육 문화 기관, 인민 군대, 농촌, 어촌” 등 모든 단위에 건설되어 “당 정책을 대중 속에서 직접 실천”²⁶⁾하였다.

초급 당 단체는 조선로동당 내의 조직 원칙과 운영 방식을 외부 사회로 확장하는 기능을 했다. “당과 대중 간의 혈연적 련계”的 원칙에 따라 다수의 대중 단체가 건설되어 사회 내의 모든 계층과 집단을 포괄함으로써 최대 다수의 인간들이 인전대적 구조에 포함되었다. 이러한 대중 단체에는 조선로동당의 외곽 단체로 간주되는 직맹, 부녀동맹, 민주청년동맹 등이 있었다. 나아가 최고인민회의 및 중앙과 지방의 정권 기관, 그리고 경제 행정 기구들도 인전대 기구의 일부로 기능했다. 이 단체들의 역할 역시 당 정책 집행을 위해 주민을 조직하고 동원하는 것이었다. 국가 또는 정권 기관은 가장 포괄적인 인전대적 대중 조직이었다. 특히 공장, 기업소 등을 포함하는 국가의 경제 행정 기구는 단일한 계획에 따라 수백만에 달하는 대중들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동원하는 가장 효과적인 인전대적 대중 단체로서 기능했다. 모든 공장과 기업소는 계획 명령의 통제를 받고 있었으며, 모든 노동 장소에 당 조직이 존재했다. 공장과 기업소는 생산 단체 이자 당이 대중에 대한 정치 사업을 집행하는 장소와 장치를 제공하는 정치 단체로 기능했다.

26) 위의 글, 522쪽.

당과 사회는 마치 기계처럼 간주되었다. 즉, 당과 사회는 기계에서나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단일한 의사, 확실한 동력 전달 관계로 특징지어지는 강력한 ‘사상 의지 및 행동의 통일체’로 유지되어야 했다. ‘인전대’라는 기계공학적 용어가 사용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²⁷⁾ 마치 기계에서 개별 톱니와 부속품이 전체 기계의 조직과 운영상의 분업의 원칙에 따라 배열되어 있듯이, 북한의 당과 사회에서도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²⁸⁾만 존재했다.

2. 권력 안정과 생산 동원

기계=‘의지와 행동의 통일체’로서의 당과 사회는 두 가지 과제와 목표를 위해서 운영되었다.²⁹⁾ 그 첫번째는 정치적인 목표로서, 혁명 권력의 발전 또는 권력 관계의 항상적 공고화이다. 이는 다른 모든 목적 실현과 화대 발전의 기본 전제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목적보다 최우선시된다. 둘째는 사회 생산력의 급속한 증대이다. 조선로동당뿐만 아니라 조선로동당의 인전대적 동력 전달 체계에 포섭된 정권 기관과 단체들은 이 두 가지 목표를 지향했다.

첫번째 과제인 권력 안정을 실현하는 핵심 작업은 당을 단련하고 강화하는 작업이며, 당은 다시 정권 기관과 모든 외곽 단체를 단련하고 강화하는 데 투입되었다. 조선로동당과 북한 사회 전체의 정치와 행정의 일상적 과정은 상하간의 ‘종속과 통제’의 관계, 인전대적 의사 전달 관계를 끊임없

27) 당과 사회를 인전대 모델, 기계 모델로 분석한 것은, Balint Balla, *Kaderverwaltung. Versuch zur Idealtypisierung der 'Bürokratie' sowjetisch-volksdemokratischen Typs* (Stuttgart : Ferdinand Enke Verlag, 1972), 특히 pp. 63~139 참조

28) 북한에서는 천리마 운동 때부터 등장하는 구호

29) Balla, *Kaderverwaltung*, pp. 81~90.

이 단련하고 강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사회공학적 조치와 권력(운영) 기술의 투입에 의해서 특징지어졌다. 이 조치와 기술 중에서 핵심은 ‘당의 공고화를 위한 투쟁’과 당의 ‘조직 지도 사업’ 및 ‘사상 사업’ 등 세 가지였다.³⁰⁾ 우선 모든 ‘종파’적 경향과 투쟁하여 당의 ‘대오의 순결성’을 유지함으로써 당을 공고화시켜야 했다. 다음으로 조직 지도 사업을 통해서 개별 당원과 산하 단체를 당의 요구와 당 규약에 ‘무조건’ 복종하는 규율적 행위자로 만들어야 했다. 당 규율 강화를 위한 권력 공학적 조치와 기법에는 당증 교환 사업, ‘반종파’ 투쟁, 당 문헌 토의, 당 생활 강화, 비판과 자기 비판, 당성 검토 사업, 당 중앙의 집중 지도, 사상 사업 등이 있었다. 특히 사상 사업은 조직 규율을 유지하는 데 노골적 강제를 절약하고 투쟁 정신이 상투화되는 것을 막아내기 위한 당 규율 강화의 핵심 기법 중의 하나였다. 당을 단련하고 강화하는 투쟁은 공산당의 외곽 단체인 인민 정권과 모든 사회 단체를 공고화하고 단련·강화하는 투쟁의 기초가 되었다. 이에 기반하여 “조국의 통일 독립과 공화국 북반부에서 인민민주주의 제도의 강화 발전을 위한 투쟁” 그리고 “계급적 원쑤와의 투쟁” 등 권력 안정을 위한 투쟁이 진행되었다.

권력 안정 작업은 생산량의 급속한 증대를 위한 전제 사회적 통원 작업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진행되었다. 권력 안정과 마찬가지로 생산 동원의 핵심 수단은 조선로동당이었다. 조선로동당은 소련 군정에 의하여 외부와 내부의 ‘계급’적 적들과의 투쟁의 문제가 대체적으로 해결된 상태에서 탄생했다. 따라서 (북)조선로동당의 활동의 주요 내용은 그 탄생 때부터 ‘계급’적 적들과의 투쟁을 통하여 권력을 획득하고자 하는 전투적 정치 조직이 아니라, 소련의 후견하에서 소련의 대외 정책적 이익에 부합하는 새로운

30) 조선로동당 제3차 당 대회 김일성의 중앙위원회 사업 종결 보고 중 당에 관한 보고의 세 가지 주제.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3차 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1956. 4. 23.), 『김일성 저작집』, 10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257~305쪽.

사회주의 국가를 북한 지역에 건설하기 위한 전투적 행정 조직이었다. 즉, 애초부터 조선로동당은 인민 정권의 건설과 행정 및 경제 운영에 개입하는 바를 주요 임무로 하는 사실상의 특별한, 다시 말해 “향도적 령도적” 행정 수행체로 건설되었다. 조선로동당의 핵심 역량은 초기부터 “경제 조직자적 문화 교양자적” 역할에 집중되었는데, 특히 당의 ‘경제 조직자적 역할’이 중요했으며, 문화 교양자적 역할은 전자를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조선로동당은 초기부터 당의 운영 목표와 조직 구조 및 운영 방식을 경제 조직자적 역할에 맞추어 나갔다. 1947년 2월 북조선인민회의와 인민위원회가 성립한 후 3월에 열린 북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차 회의는 그 선차적 관심을 “인민 경제 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두고서 당 활동의 중심을 “당(이) 경제 건설 사업에 무관심한 경향들을 없애기 위한 사상 투쟁”과 “당 조직들이 경제 계획 수행에 대하여 직접 책임지며 당원들이 생산에서 핵심적 선봉적 역할을 놀도록 하”는 데 두었다.³¹⁾ 이후에 개최된 조선로동당의 거의 모든 중앙위원회와 당 대회에서 ‘경제 조직자적’ 역할은 당의 당면 목표, 조직 및 지도 사업 개선 등과 관련한 핵심적 주제였다. 당은 “경제를 건설하고 기업을 관리 운영할 줄 알며 경제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소유한 건설자의 당”으로 될 것을 요구받았고, 전체 당원들은 “경제 건설의 선두에 서서 투쟁”³²⁾할 것을 요구받았다. 당원 확장 정책에서도 정치 사상적 수준보다는 노동 현장에서의 성실성이 중요한 기준이었다. 1956년 제3차 당 대회에서 박정애는 “당원들의 정치적 열성은 그것이 경제적 성과에 의하여 평가되어야 할 것”³³⁾이라고 하면서, 당의 기층 조직인 초급 당 단체의 임무 목록에 경제 건설과 관련된 사항만을 열거

31) 조선로동당 당력사연구소, 『조선로동당 역사교재』(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64), 205쪽.

32) 『김일성 선집』, 2권 2판, 146~147쪽 ; 조선로동당 당력사연구소, 『조선로동당 역사교재』, 217쪽 재인용.

33) 박정애, “조선로동당 규약 개정에 대한 보고”, 515쪽.

했다. 즉, “초급 당 단체는 당원들과 비당원 대중에게 당의 정책, 당과 정부의 결정들을 일상적으로 해설 침투시키며 그의 실행을 위한 투쟁에 군중을 조직 동원하며 국가 생산 계획의 완수 및 초과 완수, 농업협동조합의 조직적 및 경제적 공고화, 농업 생산고의 제고, 증산 경쟁 운동의 광범한 전개, 노동 규률 강화, 국가 및 사회 재산의 애호 절약을 위하여 투쟁하여야”³⁴⁾한다는 것이었다.

조선로동당은 당원의 급속한 확대를 통해서 북한 지역의 정권 기관 및 경제 행정 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기간 요원인 간부를 공급했으며, 동시에 모든 지방과 주요 공장, 기업소에 당 단체를 건설하여 이들 기관을 공산당 지배하에 두었다. 1945년 12월 4,350명에 불과하던 당원 수는 1946년 8월 28~30일 북조선로동당 창립 대회 때 36만 6,000명, 1948년 3월 제2차 당 대회 때 75만여 명, 1952년 12월에 이르러 100만을 돌파하고 1956년 제3차 당 대회에서 116만 4,955명으로 증대했다. 당 세포 수도 창당시 1만 2,000개에 불과하던 것이, 제2차 당 대회시에는 2만 8,000개로 증가하여 이미 이 당시에 “모든 면에 당부가 존재하고, 모든 직장과 농촌마다 세포가 건설되었다.”³⁵⁾ 당 세포 수는 제3차 대회시에는 5만 8,258개로 증대했다. 1950년 북한의 주요 중간 간부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는 당원들의 구성을 보면 나타난다.³⁶⁾ 3차 당 대회에서 발표된 “당 대렬의 성분구성”을 보면, 노동자 22.6%, 빙농민 56.8%, 중농 3.7%, 사무원 13%, 기타 3.9%였다. 3차 대회에 참가한 914명의 당 대표 중 해방 이전부터 정치 경험을 쌓아온 사람은 전체의 10분의 1 이하이며, 대부분(80%)은 1945년에서 1950년 사이에 처음으로 공산주의에 참가했다. 60% 가량이 40대 혹은 그 이하,

34) 위의 글, 522쪽.

35) 김일성, “북조선로동당 제2차 전당 대회에서 진술한 당 중앙위원회 사업 결산 보고와 결론”(1948. 3. 28.), 『김일성 선집 2』(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54), 75~77쪽.

36) 스칼라피노·이정식 풍자, 『한국공산주의운동사 3』(서울 : 돌베개, 1987), 632~635쪽.

70%가 소학교만 졸업했고, 대졸 이상은 8%에 불과했다. 직업이 제시되었던 814명은 당·정권 기관·사회 단체, 산업 운수·임산 수산·농촌 경리·금융 상업·교육 문화 보건 부문 등의 일꾼들로서 당시 북한의 중견 간부층 이상을 망라하고 있었다.

3. 당과 당원 간의 이익 갈등과 비대칭적 세력 관계

“로동 계급과 전체 근로 대중의 선봉적 조직적 부대”를 자처했던 조선로동당과 “인민 자체가 자기 손으로 조직한 인민 정권”이라 자처했던 북한 정권은 자신과 노동자, 농민 또는 인민 자체 사이의 이익 갈등 가능성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첫째, 조선로동당과 북한 사회는 일방적 위계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고, 둘째, 조선로동당과 북한 정권의 농업 집단화 및 중공업 우선주의, 그리고 엄청난 생산 동원 노선은 일반 노동자와 농민 대중뿐만 아니라, 당원 및 행정 일꾼에 대해서도 매우 힘겨운 일방적인 요구와 명령을 하달하고 있었다. 조선로동당과 사회 간의 일방적 위계 관계와 전자의 후자에 대한 무리한 정책 추진은 광범위한 적대적 태도와 저항 및 실패 현상에 직면했다.

당의 정책은 궁극적으로 노동자와 농민 등 직접 생산자 대중에게 관철되고 집행되어야 했는데, 당 정책 및 그 집행 요원인 당원과 간부에 대한 노동자 및 농민의 적대적 태도와 저항은 주로 “계급 의식이 낮다”는 언술로 표현되었다. 즉, “로동자들 중에는 아직도 로동계급의 의식으로 무장되지 못하고 비규률적이며 비조직적이며 오늘 국가의 주인으로 된 자기의 계급적 입장은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로동자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³⁷⁾ 또한 “농민들 속에서 계급적 원쑤들에 대한 경각심과 증오심이 희박하여 국가의 리익보다 개인의 리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현상이 적지 않

게 나타나고 있다”³⁸⁾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김일성은 당원과 간부에게서 나타나는 저항과 실패 현상의 원인을 “계급교양 사업을 불충분하게 진행했기 때문”이라 분석하면서, 그 현상들을 다음과 같이 나열하고 있었다. 첫째,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혁명의 성격과 기본 임무와 그 발전 전망과 수행 방도에 대하여 정확한 이해를 가지지 못한 데서 나타나는” 현상, 둘째, “혁명의 리익, 당과 인민의 리익보다 자기 개인의 리익을 높이 내세우는” 현상, 셋째, “당원들은 로동 규률을 위반하며 국가 계획 과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을 수치와 범죄로 인정하지 않으며 국가, 사회 재산에 대한 탐오랑비와 국가 재정 규률의란 폭한 위반을 서슴지 않고 감행하거나 그리한 현상과 강력히 투쟁하지 못하고 있는” 것, 넷째, “자기 자신의 공명과 출세와 탐욕에만 눈이 어두워 사실을 허식하며 상부에 아첨하고 하부에 호령하는 관료주의적 사업 방법을 계속하고 있는” 것, 다섯째, “당의 통일을 파괴하며 당을 분렬시키는 종파 행동의 악습이 남아 있다”³⁹⁾는 것이다.

그러나 이상은 당과 당 정책, 그리고 정책 결정자인 자신의 책임을 덮어두기 위한 김일성의 관점에서 본 상황 판단이었다. 하급 당원과 간부의 시점에서 볼 때 상황은 아주 달랐다.⁴⁰⁾ 당원에게 부과되었던 대부분의 과제

37) 김일성, “모든 것을 전후 인민경제복구 발전을 위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한 보고(1953. 8. 5.), 『김일성 저작집』, 8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61쪽.

38) 김일성, “모든 힘을 조국의 통일 독립과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하여 : 우리혁명의 성격과 과업에 관한 테제”(1955. 4.), 『김일성 저작집』, 9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252쪽.

39) 김일성, “당원들 속에서 계급교양 사업을 더욱 강화할 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한 보고(1955. 4. 1.), 『김일성 저작집』, 9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256~259쪽.

40) 1950년대의 북한 경제 노선을 공식 문건은 다음과 같이 이데올로기적으로 멋지게 표현하고 있다. “당은 사회주의 건설의 속도를 계속 높이더라도 그것이 현실적 가능성에 엄격히 립각할 때에는 인민 경제 발전의 계획성과 균형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데로부터

는 당 중앙이 내세우는 국가적 관점에서 볼 때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는 작업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대부분 객관적 가능성과는 무관한 엄청난 요구였기 때문에 간부의 최선의 능력을 초과하며, 노동자, 농민들의 현실적 이익과도 일치하지 않았다. 따라서 교육과 실무 수준이 낮기까지 한 중하급 간부들이 수동적이고 때때로 적대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대중을 상대로 작업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실패시의 엄중한 책벌을 피하기 위해서 간부들은 때때로 즉응적이며 난폭하고 자의적인 방법 등 대중의 불만을 초래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또한 당의 요구와 현장의 상황이 현격히 불일치할 때 현장 간부는 당의 요구를 사실상 무시하면서 현장에서 대중들과 일정한 정도로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 과도하고 모호하여 계획 과제 달성이 애초부터 불가능하더라도 당원과 간부들은 책벌을 피하기 위하여 상부에 허위 보고할 수밖에 없었다. 각급 간부들은 이러한 상황을 폭로할 수도 있는 어떠한 중앙의 감독도 회피하면서 잘못을 저질렀을 때 서로 감싸주고 묵인할 수밖에 없었다.⁴¹⁾

그러나 자신이 처한 상황이 심히 부조리하더라도 당원과 간부들이 당 중앙의 공박과 책임 전가에 공개적으로 저항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당 중앙의 무리한 요구에 적어도 외견상 복종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이외에는

터 출발하였다. 그리하여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과 대중의 창조력에 의거하여 인민 경제에 내재하는 예비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함으로써 모든 부문을 나같이 높은 속도로 발전시키기 위한 대담한 적극적 대책을 취해 나갔다.” 조선로동당 당력사연구소, 『조선로동당 역사교재』, 400쪽. 물론 이는 1958년경 ‘천리마 대고조’ 당시의 노선을 표현한 것이지만, 전쟁전 후 1940~1950년대의 전반적 기조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논리는 ‘대고조’가 상당히 누그러진 1970~1980년대 북한의 경제 문헌에도 변함없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노선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고, 이 노선을 관철하기 위한 상급 단위의 (정치) 경제공학적 방법, 이러한 노선이 야기하는 혼란과 어려움에 하급 단위가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하여 박형중, “북한의 관료제적 연줄 연구 : 기업소 관리운영 문제를 중심으로”, 『통일과 북한 사회문화(상)』(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5), 297~361쪽 ; 박형중, “북한의 경제체제와 경제문화”, 『통일과 북한 사회문화(상)』(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6), 3~124쪽.

41) 스칼라피노·이정식 공저, 『한국공산주의 운동사 2』, 536쪽.

다른 대안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구조적 요인은 세 가지였다. 첫째, 간부 신분 유지 여부가 전적으로 당의 자의적 결정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 둘째, 간부가 업무 수행에 성공하든 실패하든 모든 경우에 책벌 위험에 빠진다는 것, 셋째, 저항과 실패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해석 등이다.

먼저 당원과 간부는 조선로동당에 의해서 급속히 기간 행정 및 경제 요원으로 동원되어 신분 상승한 새로운 특권 집단이었다. 이들이 누렸던 구체적 이득은 자신의 지위가 유지되는 한에서만 계속 보장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들은 조선로동당 또는 김일성계가 요구하는 임무를 충실히 완수하는 한에서만 자신의 직책과 특권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있었다. 이들에게 요구되었던 것은 “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으로서의 ‘당성’과 행정 실무 능력 및 당 정책 추진에서의 솔선수범이었다.⁴²⁾ 그러나 이들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들은 대부분 전문성과 경험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했다. 이들은 교육 실무 수준보다는 계급 성분과 생산에서의 성실성의 기준에 입각하여 대량으로 모집된 사람들로서, 행정 및 생산 기간 요원으로서는 자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했다. 즉, “로동자 빙농민들을 위하여 당문을 넓히는 차원”에서 “그들을 당에 받아들이는데 너무 높은 수준의 준비 정도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열성 있고 기본적인 입당 자격을 갖춘 사람은 우선 입당시켜 놓고 교양 훈련”되어야 하는 사람들이었다.⁴³⁾ “당 간부들의 지도 능력과 영도 방법의 결핍”, “일부 일군들의 무책임성, 지도 능력 결여, 로동 규률 해이” 등이 반복되어 거론되었다.

42) 조선로동당 제3차 대회, 조선로동당 규약, 제2장 3항의 (b). 즉 “당원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정치, 경제, 문화, 건설 사업에 열성적으로 참여하며, 보력에서 모범이 되며, 로동 생산 능률의 장성과 로동 규률의 강화를 위하여 투쟁하며, 국가 및 협동 단체의 소유를 보호하며, 그를 중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국토통일원, 『조선로동당 대회자료집 제1집』, 526쪽.

43) 조선로동당 당력사연구소, 『조선로동당 역사교재』, 134쪽.

나아가 당 중앙의 요구, 체제의 기능 방식은 어느 한편을 충족시키자면 불가피하게 다른 한편을 위반해야 하는 동시 충족 불가능한 이중적 요구를 내장하고 있었다. 첫째, 당 사업의 방식과 작풍에 관한 것이다. 당과 당원 및 사회와의 관계는 그 본질 구조에서 명령자—복종자의 관계였으며, 당이 당원에게, 간부가 일반 주민에 대해 일방적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관계였다.⁴⁴⁾ 그러나 당 사업 집행에서 강제를 사용하지 말고 ‘교양과 설복’만을 사용하도록 요구되었다. 무리한 계획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만약 간부가 행정식·명령식 사업 방법을 사용했다면, 그는 어쨌든 계획 목표는 달성했더라도 ‘관료주의’ 때문에 징벌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했다. 그러나 계획 과제가 무리하더라도 만약 간부가 ‘교양과 설복’만으로 업무를 수행하고자 했다면, 그는 결국 자신의 무능력과 실패를 증명할 가능성이 높아진다.⁴⁵⁾ 둘째, 계획을 달성했거나 못했거나 당원과 간부는 질책과 책벌에 노출되어 있었다. 김일성은 스스로 “국가계획 위원회가 아래 실정에 맞지 않는 너무 힘겨운 계획을 세워 주었”기 “아무리 애를 쓰면서 힘을 다하여 투쟁하여도 그 계획을 달성할 수 없었습니다”⁴⁶⁾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런데 여기서 김일성은 과도한 계획 과제 하달의 책임을 국가계획위원회에 전가하고 있지만, 국가계획위원회가 무리한 계획을 짤 수밖에 없도록 명령했던 것은 김

44) 이에 관하여 박형중, “경제관리체계”, 김성철 외, 『북한 이해의 길잡이』(서울 : 박영사, 1999), 187~202쪽 참조. 사회주의 경제는 ‘명령 경제’라고 개념화할 수 있고, ‘탈스탈린화’ 이후 훨씬 ‘부드러웠던’ 체제였던 소련은 1985년 폐레스트로이카 당시 스스로 자신의 체제가 “행정·명령 체제”였다고 비판했다.

45) 물론 간부가 한두 번에 걸쳐서 국가가 제기한 높은 계획 과제를 ‘교양과 설복’만으로 완수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무리한 요구가 구조적이고 만성적인 상황에서도 교양과 설복만을 고집하면 그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실제 상황에서 강제와 ‘교양 및 설복’은 항상 혼합되어 나타난다. 박형중, 『북한적 현상의 연구』(서울 : 연구사, 1994), 126~189쪽.

46) 김일성, “인민경제계획을 세우는 데서 나타난 결함들과 그것을 고치기 위한 몇 가지 과업에 대하여”, 당 및 정권기관지도일군회의에서 한 연설(1955. 10. 21.), 『김일성 저작집』, 9권, 412쪽.

일성 자신이었다. 하급 단위가 계획 달성에 실패하는 경우 그것은 이유와 상황 여하를 불문하고 용서받지 못할 범죄로 간주되었다.⁴⁷⁾ 어쨌든 계획이 달성되었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당원과 간부는 무엇인가 규칙을 위반했을 수밖에 없다. 즉, 자재와 노력을 필요 이상으로 낭비했거나 예비로 숨겨놓았던 자재를 사용했거나 또는 규정된 생산 항목을 위반했거나 생산량 자체를 허위 보고했었을 수밖에 없다.⁴⁸⁾셋째, 당 단체의 “당 사업의 평가는 경제 계획 실행 결과로써 평가”되어야 했기 때문에 당시 경제 행정 사업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을 경우가 많았지만, 당 단체가 “행정 사업을 대행하거나 경제 깜빡니아에만 몰두”⁴⁹⁾해서는 안 되었다. 넷째, “협동조합이 좋다고 해서 농민들을 강제로 끌어들여 그것을 조직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결코 협동조합 운동을 자연발생성에 맡겨도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⁵⁰⁾

이처럼 업무 달성에 성공하자면 무엇인가 규칙을 위반해야 하지만, 이데 올로기적이며 공식화된 규칙을 지키자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즉 업무 달성에 성공을 하건 실패를 하건, 어떠한 경우에도 간부는 책벌당 할 가능성을 가지게 되어 있었다. 간부는 항상 심히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며, 상황마다 상충의 핵심 요구가 어느 편을 지향하고 있는가에 극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⁵¹⁾ 이는 당의 간부에 대한 지배에서 자의성을

47) 김일성은 “계획은 엄격한 법적 성격을 띠며 국가 계획에 따라 규정된 항목들에 대한 자그마한 위반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국가 규률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위의 글 참조.

48) 이는 명령 경제하의 일반적 상황이다. 박형중, “북한의 관료제적 연출 연구: 기업소 관리운영 문제를 중심으로”; 박형중, “북한의 경제체제와 경제문화” 참조 1950년대 북한에서 나타났던 여러 사례는 김연철, “북한의 산업화 과정과 공장관리의 정치: 1953~1970”(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6), 127~136쪽.

49)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3차 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1956. 4. 23.), 『김일성 저작집』, 10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280쪽.

50) 김일성, “농촌경리의 급후발전을 위한 우리 당의 정책에 관하여”, 『김일성 저작집』, 9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133쪽.

극대화시키며, 간부가 추종해야 하는 것은 제도와 규칙이 아니라 상급자의 자의성이다. 이는 결국 상하 관계가 인격적 지배의 형태를 띠게 만든다. 이러한 이중적 요구에 따른 간부의 약점을 걸고 나올 수 있는 것은 상급자뿐 만이 아니다. 그의 약점은 상황에 따라 위는 물론 아래, 옆의 모든 방향에서 ‘비판과 반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다음으로 당원과 간부를 당 중앙에 취약하게 만들었던 것은 저항과 실패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해석이었다. 첫째, 당과 최고 지도자와 그 정책 노선은 ‘신성 불가침’으로 간주되어 이에 대한 비판이 엄격히 금지되었다. 실제로 저항과 실패의 근본 원인은 조선로동당을 포함하는 사회주의적 정치 제도 자체, 그리고 당과 최고 지도자의 경제·사회 정책 노선 자체에 있었지만, 이데올로기적 이유 때문에 그 실제 원인이 거론되어서는 안 되었다. 최고 지도자가 앞장서서 추진했던 무리한 성장 정책 추진 자체가 계획 작성과 수행 과정을 파탄에 빠뜨리지만, 그 책임은 국가계획위원회의 계획 일꾼과 기업소 경영 책임자들의 개인적 불성실과 책임성 결핍, 궁극적으로 “당성 결핍” 및 노동자와 농민의 “계급 의식이 낫다”는 것에서 발견되었다. 둘째, 최고 지도자의 정책 노선에 대한 비판, 당원과 간부의 저항과 실패는 사회주의에 반대하는 적대적 정치 범죄를 구성하도록 이데올로기적으로 해석되었다. 당 지도부는 자신이 내세운 정책의 정당성과 적절성에 대해서는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으며, “인민 자체가 자기 손으로 조직한 인민 정권”⁵²⁾에 대한 인민의 저항이란 상상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저항은 항상 무엇인가 외래적 이물질에 의해서 초래된 것으로 해석되어야만 했다. 당원과 간부의 ‘관료주의적 태도’, 책임성과 적극성 결핍은 자본주의적 요

51) Michael E. Urban, “Political Power in the USSR : Patterns of Binding and Bonding”, *Studies in Comparative Communism*, vol. XVIII, no. 4(Winter 1985), pp. 207~226.

52) 김일성, “모든 힘을 조국의 통일 독립과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하여 : 우리혁명의 성격과 과업에 관한 테제”, 『김일성 저작집』, 9권, 229쪽.

소의 영향과 일제 통치가 남긴 깊은 사상 의식의 잔재, 그리고 종파주의자들의 악영향 등 사회주의 제도나 당 정책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들에서 찾았겠다.⁵³⁾ 또한 무리한 성장과 동원 정책 자체가 불가피하게 초래한 경제 혼란에서 야기되었던 “폭발 사건, 화재 사건, 엄청난 오작품 생산과 같은 국가에 커다란 손실을 끼치는 사건”들의 원인은 “적대 분자들의 의식적 해독 행위”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 간주되었다.⁵⁴⁾ 당 정책 노선에 대한 반대, 예를 들어 “본격적인 인민 경제 복구 건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당의 경제 건설의 기본 로선”에 대한 반대는 오직 “반당 종파 분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⁵⁵⁾

4. 당과 당원 간의 갈등 처리 방식 : 일방적인 일상적 규율 작업과 숙청

당 정책이 야기하는 저항과 실패, 고난과 고통에 대한 원인을 이와 같이 설정함으로써 북한은 실제로는 당 정책이 야기하는 여러 현상에 대한 불만의 발산을 오히려 당과 당 정책, 당 수뇌부를 옹호하기 위한 투쟁으로 유도했다. 모든 고난과 혼란의 원인이 현재와 과거(사회주의 대 일제 잔재 및 봉건 사상)의 투쟁, 내부와 외부(사회주의 대 제국주의)의 투쟁, 천사와 악마(수령 대 종파)의 투쟁, 당원과 간부, 농민과 노동자의 개인적 불성실과 무책임성 등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치유하는 방법은 당과 당 정책, 당 수뇌부를 옹호하고 ‘계급 교양’과 ‘당성’ 강화를 위해서 매진하는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53) 김일성, “관료주의를 퇴치할 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한 보고(1955. 4. 1.), 『김일성 저작집』, 9권, 276쪽.

54) 김일성, “산업운수부문에서 나타난 결합들과 그것들을 고칠 데 대하여”, 『김일성 저작집』, 9권, 310, 337쪽.

55) 조선로동당 당력사연구소, 『조선로동당 역사교재』, 322쪽.

고난과 혼란을 초래한다고 제시되었던 여러 요소들을 교정하기 위한 투쟁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실효성 있게 전개될 수 있는 투쟁은 당원과 간부, 그리고 노동자와 농민의 개인에 대한 투쟁, 그 중에서도 당원과 간부에 대한 투쟁이었다. 과거 유산에 대한 투쟁과 외부의 적에 대한 투쟁은 다소간 추상적이고 환상적이었던 것에 비해, 이 추상적·환상적 요소는 당원과 간부, 노동자와 농민 등 개인에 체현되고 있는 것으로 보였으며, 이들에 대한 투쟁은 구체적·체험적 차원에서 전개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당 중앙은 노동자와 농민에 대한 규율 강화를 당원과 간부에 위임하면서 주로 당원과 간부의 ‘당성’ 강화 투쟁을 벌였고 질책했다. 특히 당원과 간부에 대한 투쟁과 질책은 가장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 당원과 간부는 당 중앙에 대해서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원과 간부는 거의 전적으로 조선로동당 때문에 출세하여 일반 대중과는 구별되는 특권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당에 대한 충성에 구속되어 있었고, 당 규율을 통해 가장 효과적으로 징벌할 수 있었다. 또한 당원과 간부는 일반 주민과 직접 접촉하여 당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다.

당원/간부는 당 지도부가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는 속죄양이었으며, 일반 주민의 불만 발산 대상이었다. 당원/간부와 일반 주민 간의 갈등 관계는 실제에 있어서는 당 정책과 일반 주민 간의 갈등 관계의 반영일 뿐이었다. 그러나 당 정책과 일반 주민 간의 갈등과 적대 관계는 당원/간부와 일반 주민 간의 갈등과 적대 관계인 것처럼 이데올로기적으로 표현되었다. 당 중앙은 당 정책이 야기한 모든 고통과 혼란의 주요한 책임을 당원과 간부들의 개인적 태만과 사업 작품에 전가했다. 일반 대중의 처지에서 볼 때 당원과 간부는 자신과는 구별되는 특권층이었을 뿐 아니라, 현장에서 자신들이 겪어야 하는 모든 고난과 불공정과 폭력의 구체적 유발 원인이었다. 노동자 및 농민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당 중앙은 기층 대중이 당원과 간부를 비판하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이러한 논리

에 따라 조선로동당과 김일성은 당원과 간부들을 속죄양으로 삼아 끊임없이 문책하고 숙청했다. 이러한 작업은 당 중앙 또는 김일성과 일반 대중과의 ‘혈연적 연계’를 강화했으며, 체제에 대한 충성심을 높였다. 명령주의를 공박하면서 일부 간부들을 해임하는 것이야말로 최고 지도자를 ‘대중의 편’에 서게 하고 부하 간부들에게 모든 과오를 전가시키는 능란한 고등 전술⁵⁶⁾이었기 때문이다.

당원과 간부들을 문책하고 규율을 잡기 위한 작업은 “당 대렬의 순결성 보장”, “당성 단련”, “당 조직의 사업 개선”, “당 생활 강화”, “비판과 반비판” 등으로 일상적으로 진행되었다. 이 작업은 ‘종파주의’에 대한 투쟁, ‘계급 교양’ 등의 사상 사업, “원쑤들에 대한 인민 대중의 중요성과 혁명적 경각성” 고양 등의 작업과 연계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작업에서 물론 당 중앙이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중앙당 조치의 효율성은 각급 매개 단위에서의 ‘분할 통치’에 의해서 뒷받침되었다. 즉 위에서 지적했듯이, 사회주의 체제에서 고속 성장 정책 및 강력한 동원 정책이 추진되는 경우 모든 당원과 간부는 무엇인가 책벌받을 수 있는 치명적 약점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상하간, 동료간의 ‘비판과 반비판’은 양 당사자 상호간의 견제와 알력을 통해서 무력화시켰으며, 궁극적 생사 여탈권자는 당 중앙이기 때문에 살아 남기 위한 필사적 충성 및 복종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작업은 당 정책에 대한 저항을 분쇄하고, 당과 인민의 ‘전투력’을 향상시켜 결국 전체 당원과 전체 주민을 생산 투쟁으로 동원하며, 당의 경제 지도 사업에서 나타나는 (당 상충이 볼 때) 불합리한 현상들을 교정하는 방식으로 기능하도록 유도되었다.

당의 정책이 한층 무리해지면 당원/간부의 취약성은 당 중앙과 일반 대중의 양면에서 높아졌다. 당의 경제 성장 정책과 ‘사회주의 개조’ 정책이

56) 스칼라피노·이정식 공저, 『한국공산주의 운동사 2』, 536쪽.

더욱 무리해지고 일방적으로 추진되어 갈수록 사회주의 계획 경제의 관리 운영에서 혼란과 실패가 증대하며, 이에 적응하면서 무조건 목표 달성을 해야 하는 당원과 간부의 규칙 위반과 ‘관료주의’가 증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 중앙의 하급 당원/간부의 충실향에 대한 의심이 증 대했고, 당과 주민 간의 관계에서 추가적인 불만과 저항의 잠재력이 증대했다. 혼란과 저항 때문에 현장에서의 당 정책 추진이 더욱 어렵게 될수록 당원/간부는 경우에 따라서는 소극적이고 은폐된 저항을 통해서 당의 정책을 무시할 수밖에 없으며(형식주의), 궁극적으로 정책 집행에서 실패를 초래하더라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상급 기관을 속이게 되고(개인 이기주의, 공명주의), 상급자 및 하급자, 그리고 일반 주민들과 공모하여 실패를 서로 감추고 감싸줄 도당(지방주의, 가족주의)을 형성했다.

무리한 정책의 추진이 심화됨에 따라 일상적 당 작업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당 중앙이 볼 때) 당원과 간부의 실패, 불충실향, 무책임성, 일반 대중의 저항 현상이 증대하게 되면 당 중앙은 당원과 간부들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실시했다. 이러한 공격의 성격은 복합적이었다.⁵⁷⁾ 첫째, 당 중앙에 의한 공격과 당 중앙이 일반 대중을 선동하여 야기하는 공격의 이중 공격으로 진행되었다. 이 공격의 주요 목표는 그 충실향이 점점 더 의심스러워져 가는 하급 당원과 간부에 대한 대대적 징벌과 대량의 요원 교체였다. 얹눌렸던 엄청난 불만 발산, 대량 숙청에 따른 새로운 요원 충원의 필요성

57) 북한의 1950년대 숙청의 정치 과정은 소련의 1930년대 후반 숙청의 정치 과정과 구조적으로 동일하다. 물론 현상적 차원에서만 보면 전혀 다르다. 소련의 경우에는 특히 다음과 같은 사회(정치)사적 연구를 참조. Richard Lorenz, “Politischer Terror in der UdSSR während der dreißiger Jahre”, *Das Argument*, no. 114(1979), pp. 224~233 ; Gabor Rittersporn, “The State Against Itself : Socialist Tensions and Political Conflict”, *Telos*, no. 41(1979), pp. 87~104 ; J. Arch Getty, “Party and Purge in Smolensk, 1933~1937”, *Slavic Review*, vol. 42, no. 1(1983), pp. 60~96 ; Robert W. Thurston, “Fear and Belief in the USSR’s ‘Great Terror’ : Response to Arrest, 1935~1939”, *Slavic Review*, vol. 45, no. 2(1986), pp. 213~234 ; 보다 고전적인 문헌으로서 Z. 브르제진스키, 『ソビエト全體主義と肅清』(東京 : 時事新報, 1956).

이 수반하는 출세 기회, 그리고 또는 단순히 직장 내에서 개인적 반대파 제거 목표 등 때문에 당원과 일부 간부 및 일부 일반 대중은 이러한 작업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가했다. 둘째, 이러한 공격은 생산 중대의 펠 요성과 당과 당 수뇌부에 대한 충성의 필요성을 각인시키는 정치 안정적이며 생산 동원적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그 과정은 이랬다. 모든 실패와 혼란, 그리고 잠재적·현시적 저항의 원인이 적대적 주변 세계의 앞잡이와 그들의 사보타지 시도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사회주의 체제에는 외생적이고 이물질적인 “일제 사상 의식과 자본주의 사상의 영향”, “종파 여독”, “파괴, 암해 분자의 의도적 책동” 등이 대대적으로 과장되어 공개 연출되었다. 이는 외부로부터의 위협의 엄청난과 절박성을 각인시키면서,⁵⁸⁾ 대내 외의 적과 투쟁하기 위하여 북한 체제가 도덕적·물질적으로 공고화되어야 할 절실한 필요성, 당과 당 수뇌부를 중심으로 한 통일 단결을 강화해야 할 절실한 필요성을 눈앞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다. 투쟁과 숙청은 살아남은 당원과 주민의 북한 체제와의 동일시를 증폭시켜 내부를 안정화하고 체제 의식을 강화하며, 당원과 주민을 생산 동원으로 유도하는 최적의 수단이었다. 셋째, 이는 공포와 열광이 뒤섞인 과정이었다. 대대적 징벌과 대량 숙청, 엄청난 노력 동원이 수반하는 공포와 고통, 그 반면에서 대량의 출세, 악마화된 내외의 ‘적’들에 대한 대대적 투쟁, 점점 더 높아져 가는 당과 수령과 사회주의의 카리스마와 ‘신성’, 이 모든 것들이 뒤섞였다.

58) 남북한의 대결과 위기의식 조장은 남북한에서 공히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단결과 해당 체제에 대한 충성감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1950년대의 남한과 관련하여 서중석은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이승만은 북진통일을 통해 민족적 정체성을 지닐 수 있는 면이 있었다. 그리고 (북진통일에의 거대한 군중동원 속에서) 군중심리가 나타나고 위기의식과 결합되는바, 이러한 군중심리와 위기의식은 반공정신의 강화, 반공 이데올로기의 확립을 지향하며, 그것은 반공의 권리(權化)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지지로 반향되었다. 끊임없는 전시체제가 요구되는 속에서 동원체제가 가동될 때, 극우 반공체제와 이승만 권력은 위력을 가질 수 있었다.” 서중석, “이승만과 북진통일”, 『역사비평』, 여름호(1995), 119쪽, 138쪽.

이 공격은 궁극적으로 당 중앙에 대한 어떠한 불만과 저항도 불가능하며, 당 중앙이 요구하는 대로 일반 대중뿐아니라 당원과 간부들을 자유롭게 조작하여 무조건 복종 상태와 무한한 동원을 가능하게 만들고 그에 적절한 심리 상태를 조성하는 기능을 했다. 이러한 사례는 남로당 숙청 과정의 ‘제5차 전원회의 문헌 (재)검토 사업’과 엔안계 숙청 이후 1956년 말에서 1961년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나타났다. 이 두 작업의 성격은 복합적이었다. 이는 단순하게 반대 파벌 엘리트와 하급 요원을 밀어내는 것을 넘어서서, 전체 당원과 간부 및 일반 주민의 저항을 분쇄하고 규율을 확립하기 위한 작업으로서 진행되었다. 즉 ‘종파’ 요원의 숙청 작업과 비‘종파’ 당원 및 간부의 규율을 충격적으로 중대하기 위한 숙청 작업을 서로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다.

‘제5차 전원회의 문헌 (재)검토 사업’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이 사업은 권력 기구의 상당한 일부분을 밀어내어 제거하는 남로당계에 대한 숙청에 반하여 있을지도 모르는 공개 저항의 짝을 제거하기 위한 하급 당원 동원 작업이었다. 이러한 작업에 주로 동원된 것은 1951년 10월 제5차 전원회의 이후 당원 확장을 통해 농민층을 중심으로 100만 명으로 늘어난 기층 당원, 그리고 남로당계의 숙청에 의해 새로이 상승 기회를 맞이하게 될 중하급 열성 당원이었다. 이들은 김일성계의 지휘하에 ‘아래로부터의 비판’을 전개했다.⁵⁹⁾ 즉 “권력 기구 상당 부분의 폭동 위협은 통상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강제 자원만으로는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공포에 휩싸인 광신도처럼 이데올로기의 ‘진리’에 집착하는 대중을 ‘인민의 적’을 향해 동원”하는 것이었다.⁶⁰⁾ 또한 검토 사업은 전쟁 직후 북한이 직면하고 있던 전면적 폐허와 광범한 기아 상태, 당과 정권 기관의 혼란상, 당과 정권 기

59) 시바다 미노루, 『김일성의 야망, 숙청의 역사』, 101쪽; 방인후, 『북한「조선로동당」의 형성과 발전』, 188쪽.

60) Siegel, *Die Dynamik des Terros im Stalinismus*, p. 218.

관과 일반 주민 간의 갈등과 대립의 원인과 책임을 ‘종파주의’ 및 그와 관련된 ‘간첩, 파괴 암해 분자’들에게 전가했다. 이러한 목적에서 김일성은 당성 단련, 당 단체 강화, 혁명적 경각성 고양 등을 요구했으며, 이를 공장, 기업소에서 “로동 생산 능률을 높이고 제도와 질서를 철저히 확립하기 위한 대책”으로 삼았다.⁶¹⁾ 또한 이는 앞으로 진행되어야 할 ‘방대한’, ‘전후 복구사업’과 농업 및 상공업의 협동화 등 ‘사회주의 개조’에 대한 당과 주민의 저항을 분쇄하고 동원할 수 있는 태세를 만드는 기능을 했다.

엔안계에 대한 숙청과 관련하여 김일성계는 하급 당원과 간부, 그리고 전체 사회에 대한 북한 역사상 가장 대규모의 공격을 실시했다. 이 공격의 목표는 불만과 저항을 제압하면서, 당시 급진적으로 진행되었던 ‘사회주의 개조’ 및 총체적 동원 작업을 관철시키는 것이었다. 즉, 이 공격은 1차 5개년 계획 기간 내에 완수하도록 예정되어 있었던 농업 및 상공업의 협동화 작업 추진에 따른 사회적 불만과 저항의 제압, 1956년 12월 전원회의 이후 시작된 천리마 운동, 1958년 9월 ‘붉은 편지’를 필두로 한 “보수주의와 소극성을 극복하며 사회주의 건설의 대고조를 더욱 높이기 위한 당의 투쟁”. 그리고 1959년 3월 ‘천리마 작업반’으로 이어지는 엄청난 총체적 동원 작업이 유발한 저항과 불만을 제압하는 것과 연계되어 있었다. 1956년 12월 11~13일 당 중앙위 전원회의는 1957년도에 대한 기왕의 계획을 한층 높게 올려 잡았으며, ‘반당 종파’ 분자를 공격했고, 14일에는 1,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미제 스파이’에 대한 공개 재판이 열렸다. 이어서 1957년 초 까지 ‘당증 교환 사업’이 실시되었으며, 1957년 8월까지 하급 당 단체들에 대한 ‘중앙당 집중 지도’가 실시되어 ‘반당 종파 분자’, ‘반혁명 분자’, ‘스파이, 파괴, 암해 책동’에 대한 투쟁이 대대적으로 진행되었다.⁶²⁾ 1957년 3월

61) 김일성, “당을 질적으로 공고히 하며 공업 생산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개선할 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 한 결론(1953. 6. 4), 『김일성 저작집』, 7권, 489~497쪽.

당 중앙위 상무위원회의 “반혁명분자와의 투쟁의 전군총적 전개” 결정에 따라 북한 주민은 ‘혁명적 요소’, ‘반혁명적 요소’, ‘중간층’으로 분류되었다.⁶³⁾ 동시에 12월 전원회의 결정을 실천하기 위한 “투쟁을 조직 지도”하기 위해 “중앙의 지도 역량이 동원되어 체계적 협조 지도”⁶⁴⁾가 실시되었다. 1958년 3월의 조선로동당 제1차 당 대표자 회의는 기존의 “종파 투쟁”을 결산하는 가운데 지방당 조직들의 “전반적 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전당적 투쟁”⁶⁵⁾을 전개했다. 이어 1958년 9월 당 중앙위 전원회의는 “보수주의와 소극성을 반대하고 대담하게 생각하며 대담하게 실천하면서 계속 혁신, 계속 전진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고조를 한층 더 높이기 위하여 투쟁할 것을 전체 당원들에게 호소하는 붉은 편지를 채택”⁶⁶⁾했다. 이 ‘붉은 편지 토의 사업’은 생산 고조를 선동하면서 그에 저항하는 경제 관리 중간층, 주로 구 지식층을 숙청했다. 그 직후인 1958년 12월 초부터 1960년 말까지 ‘중앙당 집중 지도’가 재차 실시되었다. 이 시기의 중앙당 집중 지도는 조선로동당 중앙의 하급 당원과 간부, 그리고 일반 주민에 대한 공격 중 북한 역사에서 가장 대규모였다. 집중 지도의 중앙 조직은 약 7,000여 명으로 구성되어 “조선로동당이 창건된 후 가장 큰 규모의 조직”⁶⁷⁾이었다. 중앙당 집중 지도는 북한 주민 약 300만 명을 “반혁명적 요소”로 간주하여 처벌했으며, 약 50%의 간부를 강직시켰다.⁶⁸⁾ 이러한 숙청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는지를 보면, 당시 김일성계가 자신의 파벌과 정책

62) 徐東曉, “北朝鮮における社會主義體制の成立 1945～1961”, 327～349쪽.

63) 김남식, “북한의 공산화과정과 계급노선”, 『북한 공산화과정 연구』(서울 :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72), 204쪽.

64) 조선로동당 당력사연구소, 『조선로동당 역사교재』, 374쪽.

65) 위의 책, 391쪽.

66) 위의 책, 406쪽.

67) 김남식, “북한의 공산화과정과 계급노선”, 203쪽.

68) 김남식은 집중 지도의 결과에 따른 여러 숫자를 한 페이지 이상에 걸쳐 나열하고 있다. 위의 글, 212～214쪽.

에 대한 불만과 저항을 얼마만한 규모로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 반면에 이 시기의 광범한 처벌과 숙청은 그것을 면한 당원과 간부, 그리고 주민에게 그만큼 광범한 신분 상승의 기회를 제공했다.

IV. 당과 사회 간의 권력 투쟁

공산주의 사회에서 공산당은 역사적으로 유일무이한 권력 독점을 행사했다. 즉, 당은 이데올로기와 선전의 유일한 원천이자 정치적 강제 수단의 독점자인 동시에 생산 수단을 소유했다. 이는 자본주의 사회의 주요 지배 집단인 자본가가 생산 수단만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파시즘의 경우에는 지배 집단이 정치 권력과 세뇌 수단을 독점했지만, 생산 수단은 자본가에 의해서 처분되었다.

다른 공산주의 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지배 집단도 (정치)권력자 – 소유자 – 성직자의 3중 권력을 가진 집단이었다.⁶⁹⁾ 북한 지배 집단의 모태는 반자본주의 · 반식민주의 정치 운동에서 파생하였고, 스스로의 신념과 당파적 이익을 위해 소련의 국가 이익을 북한에서 실현하는 데 노력했던 분파였다. 이 분파는 북한에서 정치 권력 장악 이후 그 강제력을 기초로 이른바 ‘민주 개혁’과 ‘사회주의적 개조’의 조치를 실시하여 생산 수단 및 세뇌 수단에 대한 처분권을 보강함으로써 자신의 권력을 수배로 증폭시켰다.

조선로동당의 권력 장악과 여러 조치에 의해서 북한에도 두 부류의 적

69) Siegel, *Die Dynamik des Terros im Stalinismus*, p. 107. 이하에서 전개하는 논리는 Siegel과 Nowak이 전개하는 사회주의 사회에서 권력과 시민 사이의 관계 논리를 북한에 관련시켜 융용한 것이다.

대 계급이 탄생했다. 즉, 권력자—소유자—성직자의 3중적 지배 계급으로서 조선로동당 대 시민—생산자—신자의 3중적 피지배 계급으로서 일반 주민이 그것이다. 이러한 관계의 형성은 ‘민주 개혁’과 ‘사회주의적 개조’의 이름으로 정당화되었다. 이 두 조치는 일반 주민의 자율적 정치 행위와 경제 행위를 제도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일련의 과정이었다. 개별 시민의 모든 행위는 당과 국가를 매개로 해서만 가능해지도록 되었다. 권력자는 개별 시민간의 상호 행위를 권력 내부화하여 자율적 상호 행위(시민—시민의 유형)를 국가가 규제하는 상호 행위(시민—권력자—시민의 유형)로 변화시켰기 때문이다.⁷⁰⁾

권력자의 계급 이익과 시민의 이익은 기본적으로 적대 관계였다. 권력자는 개별 시민간의 모든 상호 행위를 권력 내부화하고자 했던 데 비하여, 시민은 자율적 상호 작용 영역을 가능한 한 확대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정치 권력의 획득과 행사, 정치 권력의 확장과 방어에 대한 확정된 구속력 있는 규범이나 그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 장치가 존재하지 않았다.⁷¹⁾ 권력측은 자신의 영향권에서 행위하는 시민과 기구, 즉 당원과 당 단체를 급속히 확장하여 권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시도했다. 또한 권력의 확대는 직접 억압 기구의 확대와 동반되었다.⁷²⁾

70) *Ibid.*

71) 자유민주주의적 정치 이론과 체제는 그 본질에서 정치적 의사 형성 및 정치 권력의 획득과 행사에 관한 규칙, 그리고 권력(의 확대와 침투)에 대한 방어와 권리의 순차에 관한 이론과 체제이다. 이에 비해서, 사회주의 정치 이론과 정치 체제에는 ‘사회주의 건설’이라고 하는 목적을 위해서 권력을 집중하고 동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회주의 권력 이론은 당내에서의 단일 의사 형성과 권력 집중 및 그에 기초한 당의 전투 능력의 강화라는 관점과 논리 전개를 보여주며, 권리와 개인 간의 관계에서도 개인의 권리에 대한 복종과 복무 의무를 주제로 다루고 있다. 박형중, “북한에서의 정치의 개념과 기원”, *한국정치학회 춘계 발표회 자료집*(1998. 4. 25.), 25~27쪽.

72) 1947년 3월 당 중앙위원회 제6차 회의는 “반혁명분자들에 대한 경각성”, “사법, 검찰, 내무 기관들의 역할을 높이도록” 결의했다. 조선로동당 당력사연구소, 『조선로동당 역사교재』, 205쪽 ; 이후 철은 1947년 6월부터 “보안 기관들은 우편 배달원, 전등 수급원,

조선로동당과 그 주류 파벌의 권력 확대에 대한 권력 집단 내부 및 주민의 저항은 최소한도로 한정되어야 했기 때문에 그에 적합한 이념 체계가 활용되었다. ‘반체 반봉건 민주 혁명’, ‘민주 기지 건설’, ‘사회주의 혁명’,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과 경공업 및 농업의 동시적 발전’, ‘항일 무장 투쟁’, ‘유일 혁명 정통성론’ 등의 이념 체계는 권력(주류 파벌)측의 물적 이익의 실현을 마치 북한 주민 전체의 공동체적·연대적 목적의 실현인 것처럼 설명하고 있었다.⁷³⁾ 이러한 이념 체계는 조선로동당과 그 주류 파벌의 권력 확대 필요성을 최적으로 합리화하여 북한 주민이 저항 강령을 개념화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권력 상층 내부에서 주류 파벌의 세력 확장을 보장해 주었다.

상호간의 이익이 적대적으로 대립했기 때문에 권력과 시민 간의 권리 투쟁은 불가피했다. 이 투쟁은 일정한 특징을 가졌다. 권력—소유—이념의 처분권이 분산되었고, 복합적으로 관계를 맺는 자본주의적 자유민주주의 체제와는 달리 3중의 지배—피지배 관계를 형성하는 공산주의 체제에서의 권리와 시민 간의 권리 투쟁은 후자에게 구조적으로 심히 불리했다.

권력과 시민 간의 권리 투쟁은 권력의 확장이 집단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만큼 충분히 확대되었으나 아직 ‘시민 사회’를 마비시킬 만큼 확대하지 못한 경우에 가장 높았다.⁷⁴⁾ 식민지 경험과 남북 분단 때문에 공산당 권리

각 리위원장, 인민학교 선생 등”, “다양한 근로자들을 정보 수집에 활용”했다는 것, 즉 정규 기구 이외에도 광범한 밀정 체계를 건설해 갔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주천, “북조선로동당의 당위과 그 하부조직에 관한 연구”(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8), 194~221쪽, 인용은 198쪽, 220쪽; 조선로동당 제3차 대회에서도 “내외의 원쑤들의 음모 책동과 관련하여 내무, 검찰, 사법 기관들의 역할을 높임으로써 원쑤들의 온갖 반혁명적 책동과 파괴 암해 행위들을 제때에 적발하고 진압할 것을 강조”했다. 354쪽; 이외에도 방인후, 『북한「조선로동당」의 형성과 발전』, 271~278쪽 참조.

73) Siegel, *Die Dynamik des Terros im Stalinismus*, p. 195; Nowak, *Power and Civil Society : Toward a Dynamic Theory of Real Socialism*, pp. 93~122.

74) Nowak, *Power and Civil Society : Toward a Dynamic Theory of Real Socialism*, pp. 3~20, 55~68.

에 가장 강력한 저항 세력을 형성할 수도 있었을 자산가 집단은 무력화되었다. 그렇지만 북한 주민, 특히 다수를 차지하던 농민의 노골적이고 공개적인 저항은 1950~1953년의 한국전쟁, 1954~1955년의 양곡 수매 사업, 1958년의 ‘백천 바람’을 통해서 표현되었다.

억압 수준과 저항 수준은 비례 상승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억압과 함께 권력이 포섭하는 시민 상호간의 행위 영역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 극도로 확대하면 시민의 권리에 대한 정치적 저항의 수준은 축소되었다. 노동자, 농민 출신 상당수의 권리 요원으로의 차출, 조선로동당에 의한 이익 대표 기구의 장악, 광범한 감시와 억압 체제에 의하여 북한의 주요 사회 집단, 특히 농민과 노동자는 탈계급화⁷⁵⁾되었다. 즉, 노동자와 농민은 자율적 이익을 형성하고 표출할 수 있는 집단으로서는 소멸했다. 북한에 존재하게 된 것은 원자화된 개인들의 대중이었다. 즉, 정치적 통제의 광범한 체제에 속박되고 자율적 의사 소통과 상호 작용의 가능성을 박탈당하여 집단적 저항 능력을 상실한 원자화⁷⁶⁾된 개인들의 집단이었다.

탈계급화와 원자화는 저항을 촉매하고 효율화시킬 수 있을 시민의 도덕적 능력을 급속히 축소시켰다. 시민은 끊임없이 자신의 무사 안전을 염려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고, 시민이 얼마간 위험을 느끼지 않고 의사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범주는 권력자에 의해서 선전된 범주였다. 시민은 권력 이데올로기의 순응적인 습성(Habitus)을 길러내기 시작했으며, 이 때문에 사물의 정황을 반대 이데올로기의 범주로 이해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렵게 되었다. 고도 억압적인 순종 장치 속으로 내몰린 시민은 정치적 의사 표명의 내용뿐만 아니라, 사고 방식도 바뀌어갔다. 철저하게 원자화된 개인은 권력의 공식적 선전의 ‘진리’를 믿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⁷⁷⁾

75) Siegel, *Die Dynamik des Terros im Stalinismus*, p. 314.

76) *Ibid.*, p. 135.

77) *Ibid.*, pp. 197~202 ; 박형중, 『북한적 현상의 연구』, 209~210쪽.

당원과 간부뿐 아니라 북한 주민 전체에 대한 대대적 공격을 끊했던 1950년대 후반 일련의 사태는 북한에서 탈계급화와 원자화 상황을 완성시켰다. 그리하여 억압 기술 및 감시 기술로 규제할 수 있는 최고 한계까지 권력자에 의해서 모든 상호 작용이 실제적으로 규제되는 총체적 규제⁷⁸⁾ 단계에 이르렀다. 이 단계에서는 단순히 저항이 시도되지 않는 수준을 넘어서 부정적 저항⁷⁹⁾이라고 부를 수 있는 현상들이 창궐했다. 즉, “반대 이데올로기적 사고 자산을 ‘전염병균’처럼 회피하고 현실을 권력 최적 도식에 맞추어 인식하면서—다시 말해 진실로 간주하고—시민은 ‘앞다투어 복종’을 표시하면서 고도 억압적 순종 장치에로 통합된다. 시민은 권력자의 바람을 ‘입술에서부터 읽어내고’ 받아들이면서 수행했다. 실질적으로 자신을 지킬 수 없는 상태에서 연대적·공동체론적 친양 선전 문구의 ‘진실’에 불안에 떨면서 집착하는 개인들은—저항하는 대신에—요구되지 않더라도 스스로 밀정 역할을 하며 비난한다.”⁸⁰⁾ 이는 1958년 제1차 당 대표자 대회를 전후한 광범한 숙청과 동원 과정 속에서의 “뼈를 깎는”, “비판과 반비판” 및 “종파 분자, 반혁명 분자”들에 대한 마녀 사냥식 숙청, 그리고 최고 지도부의 동원 호소에 대한 열렬한 충성 표시 등 일련의 복합적 사태에 의해서 표현되었다.

78) *Ibid.*, p. 114.

79) *Ibid.*, p. 207.

80) *Ibid.*, p. 207. Nowak은 이러한 상태를 ‘노예 상태’라고 개념화하면서 노예 상태와 카리스마, 그리고 내면화를 구분한다. 노예 상태에서의 무조건 복종은 노예가 주인의 품격을 특별히 존경해서가 아니라 주인의 권력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노예화와 카리스마는 일정한 측면에서 질적으로 유사하다. 즉, 주인에게 자신이 복종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할 때 노예는 그가 주인의 특별한 품격을 신조하기 때문이라고 종종 말하는 수가 있다. 카리스마는 노예 상태를 이데올로기적으로 위장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내면화란 어떤 특정 규범의 내용을 추종하는 것인 데 반하여 노예 상태는 규범-생산자의 의지를 추종하는 것이다. 노예는 규범-생산자가 제시하는 규범을 그 내용에 상관없이 추종한다. Nowak, *Power and Civil Society*, pp. 205~206.

V. 맷음말

이 글은 1950년대 북한에 정착하기 시작한 사회주의 제도와 발전 전략,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발생시키는 사회정치적 긴장과 갈등을 밝혀내고, 그로부터 북한 정치의 동태성을 설명하고자 시도했다. 그 동태성의 핵심은 3중의 권력 투쟁이었다. 첫째, 상층 권력 엘리트 내부의 파벌 투쟁, 둘째, 당 상층과 당 중하급 요원 간의 권력투쟁, 셋째, 당 국가와 사회 간의 권력 투쟁이었다. 이러한 동태적 과정의 결과로 북한에 1950년대 말까지 인천대적 동원 체제가 형성, 강화되어 갔다. 이는 어느 누구의 의도와 기획 또는 어느 권력자의 성격 특성에 의하여 전개되고 결과되었던 것은 아니다. 그것은 1950년대 북한에 성립한 사회주의 제도와 발전 전략이 내포한 사회주의적 긴장과 갈등, 그리고 3중적 권력 투쟁 등의 ‘무의식적’ 결과였다.⁸¹⁾ 사회주의 제도와 이데올로기는 특정한 방식으로 갈등이 전개되고 해석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각 행위자는 그 제도와 이데올로기에 합당한 행태 방식과 생존 전략을 발전시킬 수밖에 없었다.

이 글은 사회주의 체제 형성기 또는 권력의 원시적 축적기에 해당하는 1950년대 북한의 정치 전개를 분석했다. 이 글의 분석 관점은 1950년대를 넘어서서 사회주의적 권력과 정치가 본래에서 전개하는 그 이후 시기의 북한 정치(사)를 이해하는 중요한 실마리와 분석 방식을 제공할 수 있다. 물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건이 변해가고 있지만 사회주의 제도와 발전 전략, 그리고 3중적 권력 투쟁은 1950년대를 넘어서서 북한의 역사 전체를 관통하고 있기 때문이다. 설령 그 기원을 달리하는 파벌이 소멸했다 하더라도 북한의 유일적 관료체의 단결과 통일은 항상 일시적인 것이었으며,

81) 이는 거시적·구조적 관점에서의 언명이다. 단기적·상황 분석적 관점에 국한하면 이 언명은 보다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끊임없이 재수립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북한 내부에서 각 분야를 관掌하는 관료·분파간의 세력 확장을 위한 다툼은 지속되었다. 그 주요 분파는 당·정·군이기도 했고, 또는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기도 했다. 또한 수령과 당 중앙 대 중하급 당원 및 간부 간의 통일 단결도 항상 일시적인 것으로서 끊임없이 재수립되어야 했다. 가속 성장이 유발하는 혼란은 당 중앙의 중 하급 요원에 대한 통제를 혼란에 빠뜨리며, 후자에게 새로운 공간을 열어 주었기 때문이다. 또한 설령 일시적으로 당이 주민을 완전히 통제하는 데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상황에서 주민은 항상 새로운 형태의 자율 공간을 발견해내고 확장하고자 시도했다. 이러한 3중 투쟁은 새로운 여건에 맞추어 새로운 형태로 전개되었지만 그 구조적 연관은 변하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 틀은 특히 비교정치학적·이론적 북한 정치 분석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첫째, 북한의 정치를 분석하는 데 정치의 개념을 확장하고 보다 동태적으로 분석하게 한다. 단순한 상층 권력 투쟁, 지도자의 일방적 권력 확장, 주민의 지도자에 대한 일방적 충성 관계, 공식 이데올로기에 대한 주의 집중, 북한 주장의 무비판적 수용 등⁸²⁾을 극복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둘째, 사회주의 국가의 정권 유형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 관점을 제공한다. 이는 단순한 ‘특수성’론, 또는 ‘일반성’론을 극복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가설적으로 단순화시켜 말하자면, 사회주의 국가의 정권 유형은 지도자 개인 우위형(개인 숭배 또는 ‘수령제’형: 스탈린 체제, 북한, 루마니아), 중간·기술 간부 및 당 우위형(소련, 동독, 체코 등), 국가·사회 타협형(폴란드, 평가리 등)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⁸³⁾ 셋째,

82) 박형중, “북한의 정치”, 북한연구학회 편, 『분단 반세기 북한 연구사』(서울: 한울 아카데미, 1999), 27~73쪽.

83) Linz와 Stepan은 사회주의 정치 유형을 전체주의(와 슬탄주의의 결합), 동결된 탈전체주의, 성숙한 탈전체주의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는 여기서의 구분과 대략 유사하다. Juan J. Linz and Alfred Stepan, *Problems of Democratic Transition and Consolidation: Southern Europe, South America, and Post-Communist Europe*(London: The Johns

남북한 정치 전개를 비교할 수 있는 하나의 관점을 제공한다. 남과 북은 그 출발선에서 공동의 역사와 정치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분단, 산업화, 권력 투쟁⁸⁴⁾은 분명 남북한의 정치 전개에 공히 구조적 결정 요인이었다. 그러나 공동의 출발점, 공동의 구조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남북의 정치 과정을 다르게 만든 것은 정치·경제 제도와 발전 전략에서 남북한의 차이였다. 예를 들어, “‘부자 세습’과 ‘개인 승배’ 및 관련 현상들의 원인이 한국의 유교적 전통이다”라는 명제가 설득력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는 공동의 전통을 가진 남한은 왜 전혀 다른 방식의 정치 과정을 보여주느냐 하는 것부터 설명해 내야 한다. 결국 ‘부자 세습’과 ‘개인 승배’ 및 유관 현상들의 발생 원인은 일차적으로 사회주의 정치 제도의 특성으로부터 규명되어야 한다. 물론 한국적(봉건적) 정치(전통) 문화, 개인적 특질들도 구체적 정치 과정의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그것은 핵심 연관이 표출되는 외양을 풍부하게 만드는 부차적 요소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넷째, 기초적 사실 확인 및 현상에 대한 묘사를 넘어서서, 그것들의 연관에 대한 본격적인 이론적 분석을 목표로 하는 연구 작업을 진행시킬 수 있다.

이 글은 결국 사회주의 제도와 발전 전략이 함축하고 있는 ‘자가 동태성’ 또는 마르크스가 자본주의를 분석할 때 사용한 용어를 빌리면, ‘내재적 운동 법칙’에 주목했다.⁸⁵⁾ 이 분석은 ‘가치 판단적·규범적 평가’를 배제한

Hopkins University Press, 1996), pp. 235~365.

84) 김영명, 『한국 현대 정치사』(서울 : 을유문화사, 1992), 76~100쪽 ; 강광식, “한국체제 논쟁사 서설”, 강광식 외, 『현대 한국체제논쟁사 연구』(서울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5~18쪽.

85) 이 마지막 문단은 1960년대 후반 이후 (서)독일의 일부 사회주의 및 동독 연구가들이 내놓았던 이른바 ‘내재적 접근법’을 압축적으로 요약한 것이다. 박형중, “(서)독일의 동독연구에서 ‘전체주의론’과 ‘내재적 접근론’”, 『북한연구학회 소식』, 제10호(1999. 7. 15.), 10~11쪽 ; (서)독일에서 내재적 접근론에 대한 용호론적 관점에 선 동독 연구의 역사는 Heinz Peter Hamacher, *DDR-Forschung und Politikberatung 1949~1990 : Ein Wissenschaftszweig zwischen Selbstbehauptung und Anpassungzwang*(Kölin : Verlag Wissenschaft und Politik, 1991) ; Gert-Joachim Glaßner, *Kommunismus-Totalitarismus-*

채 ‘현실’ 사회주의⁸⁶⁾의 한 유형인 북한을 자유민주주의·시장 체제와는 다른 독특한 사회 구성체로 파악하면서 그 제도와 기능 방식에 내장된 고유한 특성과 파생적 현상을 보여주고자 했다. 이 분석은 그 내재적 특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 방법을 구사했다.

참고문헌

강광식, “한국체제논쟁사 서설”, 강광식 외, 『현대 한국체제논쟁사 연구』(서울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고준석, 『북한 현대사 입문』(서울 : 도서출판 함성, 1990).

Demokratie(Berlin : Peterlang, 1995), pp. 37~80 ; Hubertus Buchstein, “Ideologie und Empirie. Der Versuch einer Rekonstruktion des intellektuellen Profils von Peter C. Ludz”, Ralf Rytlewski(Hrsg.), *Politik und Gesellschaft in sozialistischen Ländern : Ergebnisse und Probleme der sozialistischen Länder-Forschung*(Opladen : Westdeutscher Verlag, 1989), pp. 121~150 ; 내재적 접근에 대한 반대 입장에 선 (서)독일의 동독 연구의 역사 및 그에 대한 평가는 Eckhard Jesse, “Die politikwissenschaftliche DDR-Forschung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Heiner Timmermann(Hrsg.), *DDR-Forschung : Bilanz und Perspektiven*(Berlin : Duncker & Humboldt, 1995), pp. 315~360 ; Klaus Schroeder, *Der SED-Staat : Partei, Staat und Gesellschaft 1949~1990*(München : Carl Hanser Verlag, 1998), pp. 621~648.

86) ‘Real Socialism’이란 용어는 원래 소련공산당이 방어적 차원에서 사용하던 용어였다. 1960년대 서유럽에 신좌파가 등장하여 소련의 사회주의는 ‘사회주의’가 아니라는 여러 논리를 전개했다. 예를 들어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의) 과도기 사회', '자본주의 이후 사회'론 등이다. 이러한 논리는 소련 체제의 '사회주의적 성격'을 인정하지 않는 논리였다. 소련은 이에 대해 소련식 사회주의가 바로 진짜 사회주의이고, 소련에는 '사회주의가 현실로 존재한다'라는 뜻에서 'real existing socialism'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다. 그 후 서방 좌우 분석가들은 반어법(反語法)적 차원에서 차용하여 소련식 사회주의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했다.

- 김남식, “북한의 공산화과정과 계급노선”, 『북한 공산화과정 연구』(서울 :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72).
- , 『남로당연구 I』(서울 : 돌베개, 1984).
- 김성철 외, 『북한 이해의 길잡이』(서울 : 박영사, 1999).
- 김연철, “북한의 산업화 과정과 공장관리의 정치 : 1953~1970”(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6).
- 김영명, 『한국 현대 정치사』(서울 : 을유문화사, 1992).
- 김일성, 『김일성 선집 2』(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54).
- , 『김일성 저작집』, 7~10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 김창순, 『북한 15년사』(서울 : 지문각, 1961).
- 안드레이 란코프, 김광린 역, 『소련의 자료로 본 북한 현대 정치사』(서울 : 도서출판 오름, 1995).
- 여정, 『붉게 물든 대동강, 전 인민군 사당정치위원회의 수기』(서울 : 동아일보사, 1991).
- 서중석, “이승만과 북진통일”, 『역사비평』, 여름호(1995).
- 시바다 미노루, 이원복 역, 『김일성의 야망, 숙청의 역사』(서울 : 겸지사, 1987).
- 박정애, “조선로동당 규약 개정에 대한 보고”, 국토통일원, 『조선로동당 대회자료집 제1집』(서울 : 국토통일원, 1988).
- 박형중, 『북한적 현상의 연구』(서울 : 연구사, 1994).
- , “북한의 관료제적 연줄 연구 : 기업소 관리운영 문제를 중심으로”, 『통일과 북한 사회문화(상)』(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5).
- , “북한의 경제체제와 경제문화”, 『통일과 북한 사회문화(상)』(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6).
- , “북한에서의 정치의 개념과 기원”, 한국정치학회 춘계 발표회 자료집(1998. 4. 25.).

- , “북한의 정치”, 북한연구학회 편, 『분단 반세기 북한 연구사』(서울 : 한울 아카데미, 1999).
- 방인후, 『북한「조선로동당」의 형성과 발전』(서울 :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 연구소, 1970).
- 백학순, “북한에서의 ‘단일지도력’의 확립과 당·국가 건설”, 『현대북한연구』, 2권 1호(1999).
- 서중석, “이승만과 북진통일”, 『역사비평』, 여름호(1995).
- 스칼라피노·이정식 공저, 『한국공산주의운동사 2 : 해방 후편(1945~1953)』(서울 : 돌베개, 1986).
- 공저, 『한국공산주의운동사 3』(서울 : 돌베개, 1987).
- 이주철, “북조선로동당의 당원과 그 하부조직에 관한 연구”(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8).
- , “북조선로동당의 당원확장과 당의 변화”, 『현대북한연구』, 창간호(1998).
- 전현수, “소련군의 북한진주와 대북한 정책”, 『한국독립운동사 연구』, 제9집(1995).
- , “‘쉬띄꼬프 일기’가 말하는 북한정권의 성립과정”, 『역사비평』, 가을호(1995).
- 조선로동당 당력사연구소, 『조선로동당 역사교재』(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64).
- Balla, Balint, *Kaderverwaltung. Versuch zur Idealtypisierung der 'Bürokratie' sowjetisch-volksdemokratischen Typs*(Stuttgart : Ferdinand Enke Verlag, 1972).
- Buchstein, Hubertus, “Ideologie und Empirie : Der Versuch einer Rekonstruktion des intellektuellen Profils von Peter C. Ludz”, Ralf Rytlewski(Hrsg.), *Politik und Gesellschaft in sozialistischen Ländern*

- : *Ergebnisse und Probleme der Sozialistische Länder-Forschung*
(Opladen : Westdeutscher Verlag, 1989).
- Getty, J. Arch, "Party and Purge in Smolensk, 1933~1937", *Slavic Review*, vol. 42, no. 1(1983).
- Gill, Graeme, "Institutionalism and Revolution : Rules and the Soviet Political System", *Soviet Studies*, vol. XXXVII, no. 2(April 1985).
- and Roderic Pitty, *Power in the Party : The Organization of Power and Central-Republican Relations in the CPSU*(New York : St. Martin's Press, Inc., 1997).
- Glaßner, Gert-Joachim, *Kommunismus-Totalitarismus-Demokratie*(Berlin : Peterlang, 1995).
- Hamacher, Heinz Peter, *DDR-Forschung und Politikberatung 1949~1990 : Ein Wissenschaftszweig zwischen Selbstbehauptung and Anpassungzwang*(Köln : Verlag Wissenschaft und Politik, 1991).
- Jesse, Eckhard, "Die politikwissenschaftliche DDR-Forschung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Heiner Timmermann(Hrsg.), *DDR-Forschung : Bilanz und Perspektiven*(Berlin : Duncker & Humboldt, 1995).
- Lorenz, Richard, "Politischer Terror in der UdSSR während der dreißiger Jahre", *Das Argument*, vol. 114(1979).
- Linz, J. Juan and Stepan A., *Problems of Democratic Transition and Consolidation : Southern Europe, South America, and Post-Communist Europe*(London :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6),
- Nowak, Leszek, *Power and Civil Society : Toward a Dynamic Theory of Real Socialism*(New York : Greenwood Press, 1991).

- Rittersporn, Gabor, "The State Against Itself : Socialist Tensions and Political Conflict", *Telos*, vol. 41(1979).
- Schroeder, Klaus, *Der SED-Staat : Partei, Staat und Gesellschaft 1949~1990*(München : Carl Hanser Verlag, 1998).
- Siegel, Achim, *Die Dynamik des Terros im Stalinismus : Ein strukturtheoretischer Erklärungsversuch*(Pfaffenweiler : Centaurus-Verlagsgesellschaft, 1992).
- Thurston, Robert W., "Fear and Belief in the USSR's 'Great Terror' : Response to Arrest, 1935~1939", *Slavic Review*, vol. 45, no. 2 (1986).
- Urban, Michael E., "Political Power in the USSR : Patterns of Binding and Bonding", *Studies in Comparative Communism*, vol. XVIII, no. 4 (Winter 1985).
- Z. 브르제진스키, 『ソビエト全體主義と肅清』(東京 : 時事新書, 1956).
- 徐東晚, "北朝鮮における社會主義體制の成立 1945~1961"(東京大學校博士學位論文, 1995).

(Abstract)

The formation of North Korean Politics and Power : the Transmission-Mobilization System and Three-Fold Power struggles

Park Hyung Jung(Korean Institute for Unification Study, Political Science)

During the 1950's the structure of the North Korean governing party and its relations with society were remolded to fit a system termed transmission-mobilization. In doing so, the hierarchical relations of order issuing and obedience were established. The transmission-mobilization system was geared at two main objectives ; maintaining political stability and increasing productivity. This system was able to gain acceptance in the presence of a collective will among the people, autonomy among all members of society and the renunciation of the social organization.

The transmission-mobilization system was the result of a three fold power struggle in the North Korean society in the 1950's. The first power struggle was among certain factions and elites in the upper layer of the Korean Worker's Party. The second was a struggle between the party center and its agents in the middle-lower layer of the party. The center wished to totally

manipulate the will and interests of the power agents, but the agents wanted to protect their autonomy and to expand their power resources. The third power struggle was between the party as a whole and society, including workers and peasants. The party wished to deprive individuals autonomy and obliterate the possibility of collective interest representation in the society.

The attempt of the party core to accelerate economic growth in the 1950's aggravated tensions, resulting in periodic purges of a great number of the faction elites, power agents, and members of society. The three power struggles were developed on the basis of the socialist institution of politics and the economy, and the strategy of rapid economic growth. The institution and economic strategies produced peculiar socialist tensions. They also gave way to peculiar socialist rules and interpretations of the tensions, forcing society to adapt its behaviors.

Key Words : North Korea, Transmission-mobilization system, Power Struggle